



PART

02

(인쇄매체) 신문 등

● 사업명

2020년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 실적

기획기사 12회, 카드뉴스 9회, 지면광고 20회

● 내용

- 기획기사

- 소규모 현장 '비계·작업발판' 안전불감증 심각
- 사고·사망 60%가 건축현장서 발생
- 안전규정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비개선 적극 투자
- 안전모 착용·추락사고 예방조치 등 세세하게 지도
- 토사유실·붕괴 위험 수시로 현장 확인해야
- 31도 이상 땀 관심, 38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
- 상하수도·배관공사 땀 산소결핍 위험성 꼭 확인해야
- 일요일 근무 50대 신입 일용직....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위험을 높다
- 산재율 증가하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모두 하락
- 건설현장 비계 추락 사망사고 막을 안전난간 선행공법 도입 서둘러야
- 사고·사망 60%가 건축현장서 발생
- 건설현장 '추락사고 감축' 팔 걷어부쳤다
- 겨울철 건설현장 '난방기 화재·폭발' 주의보

- 카드뉴스

- 산업용 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등(생략)

- 지면광고

- 설치하고 착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등(생략)

코로나가 불 지른 '휴업수당'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를 중단한 건설현장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 특성상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업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회위)의 재가남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본 건설업종의 고용 대책을 논의할 노사정 회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하는 건설현장이 많은데 대부분 임금지원 건설노동자에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회의를 우선으로 한 것은 경사회위 산하 임금별위원회 구성할 경우 절차와 시간이 상당할 수 있어 현장의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조가 건설현장 휴업수당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날

민노도 이어 한노총도 지급 요구 전례 없던 사례. 건설업계 '당혹' 원정 건설사, 지불 책임 없지만 직접 고용 하도급업체 부담 커 "특수성 감안, 발주처가 나서야"

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일부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 무급휴직 강요가 잇따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휴업수당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휴업수당은 생소한 개념이다.

우선 원정 건설사에는 휴업수당 지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임금직근로자 대부분은 원도급 건설사가 아닌 하도급사와 근로계약을 맺는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 재료, 노무, 경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공사를 계약하고, 원도급사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하도급사에 지불한다. 이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임금직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하도급사가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중단돼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가 이를 지급하고, 사후 원정사에 법적적 절차를 통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도급사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입찰 당시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가 낙찰받는 게 현실인데 휴업수당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일정에 청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을 감안해 원도급사 혹은 발주처 등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휴업수당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포괄적 임금계제를 이유로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건설 임금근로자를 위해 휴업수당 지급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전국 도로 11만km 봄맞이 일제 정비

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전국 국도와 지방도 등 전국 도로 약 11만km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얼룩지거나 손상되고, 동결융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 시설물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청소도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날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낙석과 도로파임 등 얼음이 녹는 시기에 도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장애물 위험요소 대비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해빙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곳을 위주로 도로포장 보수와 낙석취역 비탈면 보

국토부, 겨울철 손상 보완작업
경기부양 효과 위해 신속 집행



도로 포트를 도로(포항) 보수 모습

강, 배수시설 정비,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보수, 손상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도로 철소, 불법 도로점용 정비 등 경관개선 작업도 시행한다.

도로정비 예산은 올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해 경제활력 보강 등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하는 방침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현장 중대재해, 어디서 어떻게?

사고·사망 60%가 건축현장서 발생

상업·기타 주거시설 사고를 높여 추락이 60%... 70% 소규모 현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다른 산업보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29명이다.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885명의 절반에 달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14% 줄인 36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한 '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매해 절반 이상의 사고·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공종은 건축공사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자는 총 789명이다. 전체 건설현장 사고·사망 사례의 약 60%에 달한다. 건축공사 중에서는 '상업 및 기타 주거시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 전체 건축공사 사고·사망 사례 중 33.3%다. 아파트 공사현장 역시 사고·사망 발생이 많다. 최근 3년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총 147명(147명)이 사고를 겪었다. 이는 전체 건축공사 사고·사망 중 19.2%의 사고율을 차지한다. 건축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고·사망 사례가 많은 현장은 토목공사다. 최근 3년간 총 190명의 사고자가 발생했다. 전체 사고·사망 발생률의 15%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외에 전기통신, 플랜트 산업설비, 체육시설 등 복합공사의 경우 사고율이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타' 공사에서는 사고·사망 발생률이 가장 낮아지는 추세다. 사고·사망 발생은 소규모 현장에서 더 많다. 전체의 70.8%가 20억원 미만인 소

규모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금액이 20억~1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18.2%,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는 10.9%를 차지한다. 이는 공사금액에 따라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여부와 무관치 않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기존 1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관리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2020년 7월1일) △80억원(2021년 7월1일) △60억원(2022년 7월1일) △50억원(2023년 7월1일)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현장 사고·사망 사례 가운데서는 추락사고가 가장 많다. 추락사고는 연도에 관계없이 전체 사고·사망의 약 60%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추락사고를 겪은 건설근로자는 78명에 달한다. 이는 사고·사망 발생 건설현장에서 '작업 발판 미설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사고 발생 사례에서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현장의 비율은 2016년 97%에서 2017년 14.8%, 2018년 17.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관리 관계자는 "추락사고가 매년 비슷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추락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고 유형들은 각각 10%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발체에 맞음'으로 발생한 사고가 추락사고의 뒤를 이었지만, 2018년 들어서는 '발판 미설치'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김희용기자

건설인이 찾는 취업포털 건설워커

Worker.co.kr

“건설워커에 없다면 대한민국에는 없는 건설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국가기관 + 대한건설협회 + 해외건설협회 + 종합취업포털 + 대학 + 언론 + 페이스북, 트위터 (SNS) + 취업카페 등 구인광고 동시게재

SINCE 1997 국내적외 건설취업포털, 시장 점유율 · 매출 22년 연속 1위

건설워커 주요건설업체 채용정보

기업명	모집내용	경력	대기업	문의
성도건설	건축사공	경력	중소기업	092-889-1853
메이건설	개발사업(개발/인프라)	경력	04/12	02-6309-6011
대영건설	현장 보안관리자	경력	중소기업	02-2090-2121
KCC건설	안전관리자	경력	04/13	041-681-9205
한진	건축/공사, 설계, 안전, 품질, 안전, 건축/인프라, 개발	경력	04/12	043-229-2440
제일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경력	04/13	031-639-0525
디이비씨엔씨	건축(인프라/공공/민간)	경력	중소기업	092-858-8579
대영건설	CS팀장, 건축사공	경력	04/10	02-2108-7618
한신건설	건축, 설계, 기계, 안전, 보안	경력	04/30	02-3399-3183
계성	현장관리	경력	중소기업	02-3441-3250
금호건설	Project팀장/팀원 (안전)	경력	04/12	02-6303-0678
삼영건설	건축, 토목	경력	04/15	02-3433-7225
GS건설	호텔 리모델링 보안관리자	경력	중소기업	010-4350-8286

구인광고 등록신청 문의
☎ 02-990-4697 ✉ helper@worker.co.kr

건설업은 일하는 시간 짧고 임금은 높다?

비수기엔 끼니 걱정 대표적인 '통계 착시'

임용직 근로 형태 일반화 어려워
시기별로 업무량 차이 발생 뚜렷
공제회 '조사 시기 대폭 넓혀야'

건설업이 다른 산업보다 근로시간은 짧고 임금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 산업에 비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높고 정규직 임금은 산업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3만 573원으로 전년 동기(1만9622원) 대비 5.4%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3만2993원으로 전년(2만1305원)보다 4.7% 상승했다. 비정규직은 1만5472원으로 전년(1만4492원) 대비 6.8%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 산업 평균보다 831원 많은 3만1404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비정규직 임금 때문이다. 건설업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854원으로, 정규직(2만9361원)보다 높았다.

이는 금융·보험업(2만4951원), 교육서비스업(2만4300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많은 산업은 건설업이 유일했다.

시간당 급여액·급여액/소정 실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건설

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급여액은 3만1805원이었지만, 정규직은 1만9696원에 그쳤다.

근로시간의 경우 건설업 종사자 모두 전체 산업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 대비 4.0시간 줄었다. 정규직은 165.2시간, 비정규직은 112.1시간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4.5시간, 4.2시간 감소했다.

건설업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전체 산업 근로자의 평균치보다 22.1시간 적은 130.3시간을 기록했다. 정규직은 160.3시간으로 전 산업 평균보다 4.9시간 적지만, 비정규직은 98.4시간으로 전 산업 평균보다 13.7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건설현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다 시기별로도 업무량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규법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일당이 높고 비정규직으로 포괄된 숙련직 기술인력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 비정규직은 일감이 있을 때는 일이 많지만, 공사가 없는 시기에는 수입이 아예 떨어지게 돼 공정한 평가는 상당히 어렵게 발생한다"며 "조사 시기인 6월은 일감이 많은 성수기여서 조사 시기를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희용기자 hyong@

건설현장 추락사고 줄이자

#1 2018년 10월 전북 전주시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지는 외부 방출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방수작업을 하던 중 중간 난간대가 미설치된 곳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외부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못했고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2 2017년 9월에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떨어져 사망했다. 사망자는 작업발판이 없는 상태에서 기둥 거푸집 밴드 설치작업을 하던 중 높이 3.5m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역시 안전도,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현장 '비계·작업발판' 안전불감증 심각

추락사고는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분석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에서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총 1490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중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47명(56.8%)으로, 전체 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추락사고, 어디서 발생할까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기인물질을 분석하면 '비계·작업발판에 의한 사고'가 가장 빈번하다. 최근 3년간 비계와 작업발판에서 떨어져 발생한 사망자는 255명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한다. 이어 개구부 및 단부가 16.8%, 지붕 및 대들보에서 10.7% 등의 순으로 재해가 발생했다.

규모가 작은 현장일수록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사금액별 추락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공사비 12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686명(88%)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망자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다. 총 613명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는 전체의 72.4%를 차지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안전보건시설 투자에 미흡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현장에 안전시설 비용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

최근 3년간 215명이나 사망
전체 25.4%로 '1위' 불명예

안전보건공단, 50억 미만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등 설치·지원
특별기획점검도 연중 실시하기로

하고 있다. 올해 5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구입,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스템비계 설치비용은 설치 면적별로 1000만원까지 경계 지원한다. 안전방망 구입비용은 공사금액별로 3억원 미만 현장은 60%, 3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60%,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현장은 50%까지 지원한다. 건설현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한 사업주가 여러 개 현장을 가진 경우 연간 3곳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도중 종합건설업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협력업체인 전문건설업계로 확대한다. 다만, 협력업체는 걸린 콘크리트 공사, 비계 구조물해체공사 등을 통시·통제할 업체가 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별 공단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문자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찾아가 지도하는 페트(손질) 방식의 특별기획점검도 연중 실시한다. 지난해 하반기 건설현장 특별기획점검 결과, 전년보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를 57명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이에 올해는 연중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기획점검은 건설현장 추락 사고 사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비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상이다.

페트를 점검의 주요 대상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보개의 설치 상태와 안전대와 안전도 착용 여부 등이다. 골조나 철골 미장 등 구조작업에 따른 안전작업 기준과 절차도 확인한다.

추락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현장조치를 실시한다. 즉시 개선이 어려우면 현장 담당자가 일주일 이내 개선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점검 거부나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장 등 불량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해 개선과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특별기획점검은 현장에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위험요인을 알려주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동력 손실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선진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공통기획

안전보건공단

건설경제

고객과 함께한 20년 2000-2020

114 건설I14

~공사현장729부 등록 M&A전문기관
~공사현장729부 등록 중소기업인증기관

VALUE UP

건설업 양도양수 가치증대(이익잉여금) 지원

부실업체, 실태조사 지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층 전화 02-522-1114 팩스 02-522-7800 홈페이지 www.c114.com

이천점 02-3019-1179 이성국 02-3019-1101 박상수 02-3019-1119 정유경 02-3019-1118 명소영 02-3019-1103
백문점 02-3019-1117 윤복선 02-3019-1102 이은진 02-3019-1105 김복영 02-3019-1113 김희진 02-3019-1109
금보점 02-3019-1126 이아람 02-3019-1127 김은영 02-3019-1116 정영호 02-3019-1123 구자현 02-3019-1104

배 당 금 지 급 안 내

건설경제조합 제117회 총회(2020. 4. 21)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있으신 출자주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배당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채무에 충당하거나 또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금액	출자종금 1좌당 20,000원
지급대상	2019. 12. 31 현재 출자좌수를 보유한 출자주
지급장소	관할 영업점
지급기간	2020. 4. 23.(목) ~ 2020. 5. 29.(금)
지급방법	조합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

*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지급기간에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별도 청구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관할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배당금 관련 조합홈페이지(<http://www.cgbest.co.kr>) / 고객센터 / 서식·약관 / 서식에 있습니다.

* 관할 영업점 및 연락처는 홈페이지 인터넷창구 로그인시 좌측상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 4. 23.

The Best Guarantee  건설경제조합 이사장
Construction Guarantee

‘안전모 착용·추락사고 예방조치’ 등 세세하게 지도

2인1조로 꾸려진 요원들이 불시에 공사현장에 들어온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현장 패트를 점검한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방문에 현장 작업 중이던 건설근로자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이다가 ‘사고위험 특별단속반’이라고 적힌 조끼의 문구를 보자 머리에 영아났던 안전모의 턱끈을 황급히 내려 매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를 점검 팀과 함께 찾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현장 패트를 요원들이 공사장에 진입하기 전부터 직접 사찰이 발견됐다. 건축법에 따라 공사장 자림에 부착해야 할 ‘건축허가표지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지판에는 공사 규모와 예정기간, 건축주, 관리자,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와 지지체 담당부서의 연락처 등을 명시해 일반인들이 민원 발생 시 관련 문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패트를 요원들은 공사장 진입과 동시에 현장소장을 찾아 공사규모와 예정 기간, 공사장, 공종별, 현재 작업내용 등을 묻는 후 현장상황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작업자의 작업 형태와 개인보호구 착용, 추락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안전모 착용 불량과 미착용, 안전대 체결 불량, 이동식 사다리 사용 부적절, 안전난간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등이 주요 단속사항이다.

작업발판 안전난간 방향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속설비 설치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 여부도 살핀다. 화재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소화기 비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자, 위험 요인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제단 밑에 임시로 설치된 발판이 지적 대상에 올랐다. 고정되지 않은 발판은 무거운 자재를 들고 오가는 작업자들이 미끄러져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요소다. 이어 노후 이동식 사다리, 경량형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 등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다.

2층으로 올라서자, 새로운 사항들이 쫓쫓이 나온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자, 제대로 보이지 않은 개구부 덮개가 발견됐다.

“경로에는 잘 쓰다가 저음은 더워서 잠깐 안 쓴 거예요. 미안해요”라는 작업자의 말에 패트를 점검 요원은 “저희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미안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모만 제대로 써도 사망사고인 사다스락 등의 사고는 10%도

중사 규모·작업 근로자 파악
개인보호구 착용 등 중점 확인
현장소장에 위험요인 사정 지시
하루 3~4개 현장 불시점검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작업 중인 미장공, 이동식 작업대 위에 빈 플라스틱통을 올려 놓고 그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당부했다. 약 30분간 점검을 마친 후 패트를 요원들은 현장소장에게 지적했던 위험요인을 다시금 짚어주며 시정을 지시했다.

현장소장은 시정사항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패트를 요원에게 개선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충노동부에 신고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패트를 점검은 공사장 다음 현장으로 향한다. 이러한 불시점검은 하루 3~4개의 현장에 걸쳐 이뤄진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두 번째 현장에 진입하자, 패트를 요원들이 다음

히 외한다. “저기 선생님! 조심조심! 저음 하면 거너우고 일단 내려오세요!” 위험한 안전모를 착용하는 모습은 미장공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 작업자는 이동식 작업대 위에 빈 플라스틱통을 얹어두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더욱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자칫 중상을 입고 넘어지거나 발판이 쓰러질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이었다.

큰 소리에 놀란 현장소장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그 역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위험 요인들은 계속해서 발견된다. 피복이 벗겨진 채 연결돼 있는 콘크리트, 외부 계통 위에 얹어 있는 견본자재,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 방호선반이 미설치된 주출입구,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난간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패트를 요원들의 눈발미를 피할 수 없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나 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작업할 때 거처적 현장에 진입하자, 패트를 요원들이 다음 히 외한다. “저기 선생님! 조심조심! 저음 하면 거너우고 일단 내려오세요!” 위험한 안전모를 착용하는 모습은 미장공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 작업자는 이동식 작업대 위에 빈 플라스틱통을 얹어두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더욱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자칫 중상을 입고 넘어지거나 발판이 쓰러질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김희용기자 hyung@

올해 패트를 점검은

전국 3만여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역량 집중 사고사망자, 작년보다 130명 이상 감소 목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중 실시하는 건설현장 패트를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실시한 ‘100일 특별대책’-10월’에서 발전된 사업이다. 이는 ‘집중’과 ‘차별’을 전제로, 단기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기존의 사업방식을 ‘현장순찰’ 불시점검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단은 전 현장 불시점검을 위해 기존 실용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하게 점검 중단하고, 사망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100여개 미만 건설현장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간 116명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소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1999년 사고사망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소로, 패트를 방식으로 역량을 집중한 건설업에서는 가장 많은 57명이 감소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2000여곳이 늘어난 3만개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패트를 점검을 펼친다.

보호구 미착용이나 안전대 체결 불량, 안전난간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등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린다.

즉시 시정이 어려운 개선사항은 현장

책임자에게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이 경우 일이나 모바일 패스를 일주일 이내에 개선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추락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나 칸라방범을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나 작업관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고예방카드’를 활용한 현장 안전교육도 제공한다.

점검을 거부하는 현장이나 미개선 등 고위험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고충노동부 행정조치 요청을 연계한 현장 감독으로 개선 및 감소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삼각성에 따라 현장점검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패트를 전용자재를 이용해 최대한 대면소통을 줄이고, 현장에 나스스 제공과 간접명 예방수칙 안내 등을 병행해 안전점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 최근 이한 불투명하고 화재사고 발생과 관련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의 응접 등 화기작업과 전기 기계기구류 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위험요인도 점검 내용에 반영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패트를 방식을 공식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함으로써 지난해 855명인 사고사망자를 2020년 725명 이하로, 130명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희용기자

건설 분쟁 및 회생 전문 로펌

-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 보충, 기입료, 공업특허분쟁
- 건설회사 회생(신청-인가, 채권자 대응)

www.e-arlaw.com / 023477-5006 / sayu@e-arlaw.com

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윤서용

서울대학교 법학박사/중앙대학교 건설법학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
가. 공학(건축) 및 법(민법) 출신 변호사 다수 포진

터파기가 필요없는
**신개념 가시설 겸용
자립식 옹벽**

SPACE R-Wall 공법

고속도로 교량 하부
자립식 옹벽

- ✓ 최소공간(60~70cm)에서 터파기없이 간편시공
- ✓ 부지 추가 확보 및 토지보상비 절감
- ✓ 사유지 침범없이 대지경계내 시공
- ✓ 가시설 겸용 옹벽으로 급속시공 가능
- ✓ 옹벽시공 배제 및 지장물 간섭구간 적용성 우수

세종시 BRT 터미널 지하차도

부천역대 주공아파트

군도13호선 도로공사

cabletec
케이비텍(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6, 7층(수내동, 분당동부루트빌)

www.cabletec.co.kr Tel. 031-606-8020

97

온열질환 꾸준히 증가... “물·그늘·휴식, 꼭 기억하세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건설현장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미 서울과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등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하루 체감온도 최고기온이 이를 이상 33도가 넘는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35도가 넘는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내려진다.

폭염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	계	건설업	기타업종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업종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2014	5	4	1	3	2	1	1	3	2	1	1
2015	7(1)	4(1)	3	10(1)	2(1)	2	5	3	2	1	1
2016	34(6)	15(4)	19(1)	10(1)	2	2	5	3	2	1	1
2017	25(5)	12(4)	13(1)	9(1)	2	2	8(1)	3	2	1	1
2018	65(12)	33(7)	32(1)	17(1)	2	2	17(1)	3	2	1	1
2019	22(3)	13(3)	9(1)	3	1	1	3	3	2	1	1
계	158(27)	81(19)	77(1)	42(3)	5(1)	7(1)	61(1)	17(1)	11(1)	6(1)	6(1)

※ 1. 사망자수, 발생일 기준(20.4.30. 기준 산재승인자료 추출)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6~8월) 평균 기온은 평년(23.6도)보다 0.5~1.5도, 지난해(24.1도)보다 0.5~1.0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하는 폭염일수도 20~25일로 평년(9.8일)과 작년(13.3일)보다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열대야 일수도 12~17일이 이를 전망이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아열대 지역이 많은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보다 무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위는 전역적 저하를 야기하고 온열 질환을 일으킨다.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전체 산업에서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 온열질환 발생 사례는 총 81건으로, 이 중 19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특히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했던 지난 2018년에는 건설업에서의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이 평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유발한 실제 산업

건설현장, 야외작업 많아
다른 산업보다 더위에 취약
최근 5년간 19명 목숨 잃어
코로나19 전염병 지속 영향
올 여름 체감도 더 심할 듯
열사병 예방 수칙 꼭 지켜야

사망 건수가 공식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여름마다 가동하는 온열질환 감시체계에는 열사병, 열탈진 등 더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는 6개 질환만 폭염 피해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 조치가 더해지며,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더위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통해 건설현장 종사자에게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바 있다. 건설현장에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그늘·휴식'으로 대표되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장은 작업자 탈수 예방을 위해 아이스박스, 보냉 음료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내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동시에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로 내린해야 한다. 그늘막이나 차양막으로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별도 휴게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의자나 돗자리 등의 물품도 구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 때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단을 요청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

건설기계와 농작업도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0분 정도의 시원한 물(냉면)을 섭취해야 한다. 알코올, 카페인에 있는 음료는 금물이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작업자들이 무더위 인해 안전도, 안전 다 등을 잊지 않도록 안전장구 착용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김희용기자 hyong@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수칙은?

31°C 이상 땀 관심, 38°C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

열사병에 걸리면 의식장애, 혼수 등 중추신경계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열탈진은 과도한 땀, 극심한 무력감,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열사병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존에 따른 올바른 대처법과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31°C 이상은 '관심' 단계다. 근로자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갈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민간한 근로자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33°C까지 올라가면 '주의' 단계

에 접어들다 시간당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무더위 시간대(오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속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 옥외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팩이나 아이스팩 등 보냉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35°C 이상은 '경계' 단계다. 시간당 휴식시간을 15분으로 늘리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열탈진 환자는 즉각 안정 취하고 체온 40도 넘으면 얼음물 先차량

민간한 근로자는 옥외작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수면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땀띠,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이 38°C를 넘어서면 '심각' 단계로 올라간다. 이때부터는 무더위 시간대에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이 아니라면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더위 때문에 일어나는 근육 경련은 열분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0.1% 농도의 식염수를 공급하고 근육 내 사지를 해야 한다.

체온이 38°C 이상인 열탈진 환자는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식염수를 공급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체온이 40°C 이상인 열사병 환자는 제 한 하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얼음물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38°C 이하로 빨리 내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때는 찬물로 몸을 닦으면서 선풍기를 사용해 증발 냉각이라도 시도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열피로',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일어날 경우에는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냉수 목욕 등을 통해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김희용기자

공통기획

안전보건공단 · 건설경제

유크리트(Ucrete®)

SILKROAD T&D는 세계 최대 화학기업 BASF의 고성능 산업용 바닥재 유크리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 건설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

유크리트 시공 전

유크리트 시공 후

유크리트 시공 중

유크리트 시공 완료

인증 획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품 특성

내구성, 내열성, 내화학성, 위생성, 내오염성, 미끄럼 방지, 대전 방지, 신축성 도로 및 양생(내충성), 내화성, 맞춤형 솔루션

제품 적용 분야

식품 산업, 화학 산업, 제약 산업, 플랜트, 병원, 냉장·냉동 창고, 조리 시설(주방 및 급식실), 중앙방역 시설이 있는 구역, 습한 환경 바닥 등

주요 프로젝트 현장

CJ, Coca-Cola, Pulmuone, emart, 하림, 롯데푸드, Maeil, 세브란스병원, 아워홈

로드포시(ROADPOXY®)

친환경 에폭시 바닥재

실크탄(SILKTHANE®)

우수한 인장 및 인열강도, 신장률을 가진 우레탄 방수재

CONTACT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현대카드빌딩), 15층 Tel. 02) 2057-6910 Fax. 02) 2057-6600 E-mail. fteam@silkroadnt.co.kr Website. http://www.silkroadnt.co.kr

사 업 분 야

바닥재, 종화제, 급결제, 실리카흙, Fly-ash, 분쇄제 / (주)실크로드인터내셔널 / (주)실크로드시스템 / (주)실크로드하노이 / (주)실크로드비나

기획기사(2020.6.22.) - 31도 이상 땀 관심, 38도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

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잔결음'

중소규모 민간 현장도 안전 전문가 별도 선임

중소 규모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안전 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전 물류센터 공사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된 위험작업 동시 진행 등 시공 과정의 총괄 안전관리 책임은 원도급사에 두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재해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내린달 예정인 건설안전특별법에 이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발주자의 배

공과 동원 적용 규정 마련 사업 단계별로 '각 주체'들의 '관리 역할-책임 구분'이 핵심 업제 '산안법과 중복규제 우려'

특정법에는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발주자는 특정 공사와 공사기간을 내면해 설계나 시공, 관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위치가 건설공사에서 가장 큰 권한이 있는 발주자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지우자는 것인데, 건설 관련 전문성이 낮은 중소 규모의 건축공사 발주자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책임이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다만 발주자에게 지도나 조언을 제공할 안전전문가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지는 않고,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할을 고려해 하도급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공

관리의 총괄 책임을 원도급사가 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하도급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의 최종 책임이 원도급사에 있다는 의미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 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외에 근로자재해공제보험(근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별법에는 법적 조항도 마련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다 공사를 중지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공사는 과다 공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기존 법칙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율을 위해 특별법 제정 위치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용 증가와 중복 규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근재보험을 확대한다면 가입 주체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보험료는 발주자가 내더라도 원형이나 하도급사 중에 누가 가입 주체가 되는지 추후 책임소재가 될 때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안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규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시공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도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대책과 유사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두 번씩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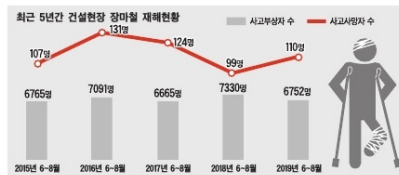
기획기사 haesook@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어떻게?

토사 유실·붕괴 위험... 수시로 현장 확인해야

#1 지난해 7월 31일 서울시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에서 순찰에 나선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시설 점검을 위해 깊이 45m 지하 저류시설로 내려갔다가 기습적인 폭우로 배수시설 내부로 빗물이 다량 유입되며 휩쓸렸다.

#2 같은 달 15일에는 전북 진안군의 문화재 시굴조사 현장에서 굴착작업장의 토사가 붕괴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4명이 발생했다.



지하매설물 현황 파악하고 가설도로 안전 확보 등 필수 것은 손으로 기계 조작 말고 미끄러짐 방지 대책도 세워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감전사고 역시 장마철에 집중되는 재해다. 장마철에는 전기기계 기구를 켜는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건설업 관련 사고부상자의 24%(151명), 관련 사고사망자의 13%(9명)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모든 전기기계 기구는 누전차단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외함 접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임시 수전설비 설치장소는 철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임시 본 전선만 배에 맞춰 놓는 장소에 각각 설치해둔다.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 전 절연상태를 점검하며, 절연장갑이나 절연장갑 등 개인보호 장구도 꼭 착용해야 한다.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사고도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사고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물, 개구부 주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호 등 개구부 덮개 등을 사전에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작업자들 역시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토사 붕괴는 주로 흙막이 지보공이 무너지거나 배수 불량으로 인한 응력 및

석속 붕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빗물이 스며들며 흙의 강도가 저하되고 토사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사면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운행을 금지하거나 자재 등의 쌓기를 금지해야 한다. 현장 주위의 흩날린 지보공, 응력과 석속 등의 상태는 사전에 미리 점검

해두고, 필요시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강풍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무너짐·넘어짐 재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순간풍속이 초속 10m를 넘으면 타워크레인 설치나 수리, 점검, 해체작업 등을 중지하고 절단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순간풍속이 초속 15m를 넘으면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을 멈춰야 한다. 초속 30m를 초과하면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각 부위의 이상 유무 점검을 먼저 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가설물과 안전표지판, 적재물이 제대로 결속됐는지 살피고, 육상 가설 및 재료 등을 견고하게 묶거나 낮춰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망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비계 등에 대해서는 과다한 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트에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강풍 예보가 있으면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지 말고 기상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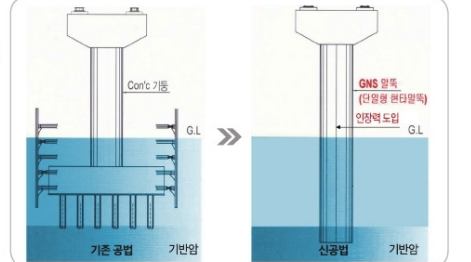
김희경기자 hyang@

공공기획
안전보건공단 + 건설경제

인장력이 도입된 단일형 일체화 교각 공법

- 현장타설 말뚝 내에 긴장시스템(강봉, 강연선)을 적용
- 외력에 대한 취약구간 (1:1β)에 프리텐션을 가해 초기 변형 억제
- 기존 단일형 형태말뚝보다 큰 말뚝의 수평저지력, 휨 강성을 확보
- 대규모 말뚝의 구조적 안정성 향상
- 말뚝체의 프리텐션 도입으로 말뚝 단면 감소효과

공사기간 50% 이상 단축
가시성, 기초 타파기 불필요
공사비 20% 절감
현장 재확조전 최소화



GNS 지엔에스건설(주)
Geotechnical & Structure Construction Co., Ltd.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로 120, 유덕희 19009
TEL. 031-214-6390-3 FAX. 031-214-6394
www.gs21c.com

지오테크엔지니어링(주)
GEOTECH ENGINEERING CO., LT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대소로 76, 414호 (대우 디모빌)
TEL. 031-479-6610 FAX. 031-479-6611
www.geotech.co.kr

기획기사(2020.7.3.) - 토사 유실·붕괴 위험... 수시로 현장 확인해야

4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여름철 불청객 '질식사고' 예방하려면

제16196호 건설경제

상하수도·배관공사 땀 산소결핍 위험성 꼭 확인해야

지난 5월 서울 강남 소재 하수구 개량공사 현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맨홀 아래로 추락하고 동료 노동자가 구하려 들어갔다가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0월 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아르코로 차 있던 배관 내부에 훼손된 파지덤(퍼지페이라)을 복구하기 위해 작업자 1명이 배관 내부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여름철은 질식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다. 특히, 밀폐공간은 공간의 특성으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치명적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등 인위적 환경악화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인위적 물체에 의한 화재나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을 말한다.

공기 중 산소농도는 일반적으로 21% 정도다. 산소결핍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다. 산소결핍 장소에서는 경신이 혼미해지거나,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심할 때는 순간적으로 경신을 잃고 5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특히 여름철은 기온이 상승하고 집중호우나 장마 등으로 경화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산소결핍 상태가 되기 쉽다.

산소농도가 정상범위(18~23.5%) 이하로 내려오면, 폐가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녹아있던 황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해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는 물론 작업 중 반드시 지속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환기가 충분해 되지 않아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의 밀폐공간에 작업자가 들어가면 질식 재해가 발생한다.

특히, 질식사고는 재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 일반 사고고 재해의 사망률이 1.3%인 것에 비해 질식으로 인한 사망률은 52.9%로, 일반 사고고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2019년) 질식사고로 인해 303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16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현황 · 발생건수

구분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발생건수	153	12	17	26	28	27	19	19	14	15	16
불상자(명)	146	9	15	15	24	25	11	19	5	12	11
사망자(명)	166	12	14	20	31	16	14	14	18	14	13
계	312	21	29	35	55	41	25	33	23	29	24

장마철 밀폐공간에서 미생물 증식 공기 중 산소농도 평소보다 적어 발생하고 작업량 사망사고 발생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도 위험

작업전 환기팬 사용에 정화하고 반드시 보호장비 갖추 진입해야

또, 질식 사망사고는 밀폐공간이라는 장소적 특성에 따라 구조자가 호흡용 보호장비 없이 구조에 나서다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사망자 166명 중 23명이다. 큰 근로자를 구조하려고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 중 질식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전체 질식사고 사망자의 44%를 차지한다.

사고현장은 주로 오후 5시 이후, 상하수도 공사현장이나 배관공사 등에서 발생했다.

유해인자별로는 166명의 사망자 중 황화수소에 의한 사망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산소결핍에 따른 사망자는 39명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우리나라 건설업에서 벌어지는 질식 재해는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이 밀폐공간에서의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며 "사업주와 밀폐공간 관리자, 작업자가 질식 재해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작업장 내 질식사고 우려 작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무단출입 금지 ▲작업 전 작업 중 환기 ▲구조 시 공기 호흡기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제시한다.

우선 밀폐공간과 같은 질식 위험장소는 작업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작업 전에 교육과 훈련, 밀폐공간 내 유해물질 요인에 대한 파악 및 관리방안 등의 프로그램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밀폐공간으로 평가된 장소에는 작업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표시를 하고 안전 조치 없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환기도 중요한 요소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밀폐공간은 강제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출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팬을 사용해 급기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밀폐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해 구조 작업이 필요한 경우,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통로를 구조해야 한다.

산소농도가 현저히 부족한 밀폐공간에 보호장비 없이 들어갈 경우 순간적으로 경신이 혼미해지거나 의식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작업근로자가 보호장비를 착용 후 밀폐공간 맨홀로 들어가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은 질식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고위험도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한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해 작업환경실 태조사에서 밀폐공간을 보유

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배출시설 보유사업장을 중점 지원한다.

공단은 이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밀폐공간 보유현황 등을 조사하고, 위험 수준을 고·중·저 위험도로 등급화해 위험 수준이 고위험으로 평가된 사업장에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직접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밀폐공간 작업 때 필수 요장비인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나스크, 환기팬, 구조용 삼각대 등을 관련 사업장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장비 무상 대여 신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특히,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한다는 방침

이다. 공단은 사업장이 신청하고 공단을 방문해 수령하던 기존 방식에서 사업장이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해 장비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개편할 계획이다.

질식사고 예방 장비에 대한 구입비 용도 일부 지원한다.

공단은 50인 미만 소기업에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으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나스크, 환기팬,

건급 구조설비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 시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질식 재해 예방 교육 및 기술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홈페이지(미디이) 현장배출서비스를 통해 질식 재해 예방 스티커, 안전표지, 안전수칙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9호)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장의 사업주가 작업 전 '밀폐공간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희용기자

공통기획
산업안전보건공단 + 건설경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친환경 전기 굴착기 HR35e

호룡 HR35e

친환경 고성능 전기차 시대
이제 건설기계 미니 굴착기도 전기화, 친환경, 저소음 시대

- 전기구동으로 매연이 없으며, 디젤 굴착기에 비해 적은 소음
- 무인리모컨 조작이 가능하여 위험지역 및 오일 지역, 브레이크 작업 시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
- 단독동작, 및 복합동작 시 전기 조이스틱이 적용되어 감각이 부드럽고 장시간 사용시 부드러운 조작감 유지

• HR35e

• 전복 감속시 안전을 위한 경광 2회 73번 (구, 통상 106 회)
• 대표번호 : 063-540-5555 팩스번호 : 063-544-2433 영입번호 : 063-540-5530

HORYONG

기획기사(2020.7.27.) - 상하수도·배관공사 땀 산소결핍 위험성 꼭 확인해야

4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종합

제16212호 건설경제

1.8兆 규모 5개 대형사업, 상반기 중앙투자심사 통과

7477억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용·복합 개발, 10월 ‘첫삽’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 5건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를 통과했다. 예산 편성을 위한 관문을 넘으면 서 사업 추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8일 <건설경제신문>이 행정안전부의 '2020년 중투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8244억원이다. 중투심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지방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법적 절차다.

중투심을 통과한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가장 많은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용·복합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조건부'로

조건부로 관문 넘어... 2024년 준공 7219억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신속 추진 여수경도 도로건설 등 3건도 탄력

2020년 중앙투자심사 통과한 1000억 이상 대형사업 (단위: 억 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용·복합 개발	(7477억)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7219억)
대구시 성서 자원화시설 개발사업	(1210억)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1178억)
경남 고성군 스마트수산 ICT 사범단지 조성	(1130억)

중투심 관문을 넘었다.

총사업비 규모가 7477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국비 346억원, 시비 2394억원, 기타재원 4737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천시 중앙부천종합운동장 일원 49만㎡ 규모 부지에 용·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연구 개발 시설과 공원 녹지, 친환경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올해 10월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7219억원으로 대어급이다. 역시 조건부 중투심을 통과했다.

고양시 일산신구 방곡동 일대 88만㎡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증경현실(AR) 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한다는 계

획으로 경기도·고양시 경기도공사 고인도시설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간 회인가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고, 하반기에 토지 및 불건 조사를 완료해 보상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성서 자원화시설 개발사업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입도로 건설사업 △스마트수산 ICT 사범단지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이다.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성서 자원화시설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210억원 규모다.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재검토로 전환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의 입찰방향을 탄기 설계 시공 일괄입찰로 결정하고,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 기

준방식으로 하반기 발주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178억원의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입도로 건설사업은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에 대비해 신월동과 아도, 대경도 간 1.3㎞를 아치고, 사당교 등으로 잇는 사업이다. 내년 6월 개설공사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경남 고성군이 추진하는 스마트수산 ICT 사범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130억원 규모다. 축산산업의 고밀적 특성에 맞춰 가축 질병 및 생산량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다. 거꾸로 부지 19만㎡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한다.

이 밖에 지방도 363호선 아동~금송도로 화포정공사(총사업비 533억원)도 중투심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재현기자 hyun@

‘일요일 근무 50대 신입 일용직’...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위험률 높다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 발생 위험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일요일에 근무하는 50대 신입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이 최근 발간한 ‘안전사고사망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요일 건설현장 사고발생 위험률이 평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발생 위험률은 근무자 수에 100%를 곱해 사망자 수를 나타내 수 치화한 지표다.

건설일의 일요일 사고발생률은 64.9%로, 평일 사고발생률(36.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토요일의 사고발생률은 21.5%를 기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공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현황 분석 일요일 사고발생, 평일의 두배 고령층 상대적으로 위험하지만 현장경험 많으면 다칠 확률 낮아

“축박한 시일 내 공사를 내쳐려고 무리한 작업을 벌이다 보니 건설근로자의 피로가 누적되고 발주기관의 관리 감독기능이 약해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이 잇따라 지난 5월 국회에서는 일요일 공공건설공사를 금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 이상의 고령층 일용직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2018년 발생한 건설업 업무상 재해 사고사망자 중 가장 높은 평균 비중을 차지한 연령층은 50대로, 전체

건설업 사고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망수(명)	백분율(%)	사망수(명)	백분율(%)	사망수(명)	백분율(%)
20대	8	1.7	6	1.3	9	2.3
30대	32	7	23	5	16	4.1
40대	89	19.3	74	16.2	69	17.8
50대	187	40.7	177	38.8	153	38.4
60대 이상	144	31.3	176	38.6	141	35.3
계	460	100	456	100	388	100

사고 사망자의 근무기간별 분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망수(명)	백분율(%)	사망수(명)	백분율(%)	사망수(명)	백분율(%)
6개월 미만	373	81.7	340	82.5	230	86.1
6개월~1년 미만	26	6	31	7.5	17	6.4
1년~2년 미만	9	2	15	3.6	10	3.7
2년~5년 미만	9	2.1	14	3.4	5	1.9
5년 이상	7	1.6	12	2.9	5	1.9
계	430	100	412	100	267	100

사고사망 발생자 중 39.6%에 달한다.

60대 역시 사고사망자 비율이 높다. 60대는 평균 36.4%의 비중을 차지하며 50대의 뒤를 이었다. 반면, 20~30대의 사고사망 발생자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20대는 평균 1.7%, 30대는 평균

5.3%의 사고사망자가 나왔다.

근속기간별로는 ‘초짜’ 근로자의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5.1%에 달한다. 사실상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에서 사

고사망자 대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어 △6개월~1년 미만 6.6% △1~2년 미만 3.6% △2~5년 미만 2.4% △5년 이상이 2.1%를 기록했다.

근속기간이 긴 ‘베테랑’일수록 사고사망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사망자 비율이 높아지는 제조업과 대조를 이룬다. 제조업의 근속기간별 사고사망자는 6개월 미만이 31.1%로 가장 높지만, 이후부터는 △6개월~1년 미만 10.5% △1~2년 미만 14.1% △2~5년 미만 20.9% △5년 이상이 23.3%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작업이 익숙해질수록 발생하게 돼 사고율이 높아지는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작업을 보다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영기자 hyung@



식생보강토옹벽 녹화공법
간단한 시공! 우수한 경제성! 부분보수 가능!



SSC 산업(주)
한국도로공사 지정 우수기업
경기도 남포시 남포로111호 312, 428호
02-704-8000
www.ssc.co.kr



UCI공법
향만내진보강! 구조물기초보강은!

• 분사요율 2배 향상!
• 분사주입시간 단축!
• 공기단축과 공사비절감!

〈적용 분야〉

- 내진성능 보강
- 하천, 제방 기초지반 보강
- 구조물 기초보강

기획기사(2020.8.19.) - 일요일 근무 50대 신입 일용직.... 건설현장 사고사망 발생 위험을 높다

4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종합

제16229호 건설경제

실마리 못찾는 ‘전문건설 대업종화’... 반발기류 여전

전문건설업종 개편의 실마리 찾기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반복되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업종들 둘러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전문건설협회 산하 18개 임종별 협회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종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39개 전문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줄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일괄 기간제기간을 두고 다른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설업종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종 개편안이 세간에 알려지자 일부 업종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고, 이에 국토부는 반대자 심한 입장을 대상으로 개별 설득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 업종별 대표자들과 간담회 개편안 논의 했지만 이전 못쫓아 포장공사업 대규모 집회 이어 1인시위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위험소송 불사”

전문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모든 업종을 불러모은 만큼 임의적이고 발표를 앞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업종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표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전문업종에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대업종화는 종사자들의 대량 실업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을 유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반대 의사가 뚜렷한 업종은 포장

공사업이다.

국토부는 포장공사업을 토공사, 보행 그라우팅, 과잉공사업을 통합한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으로 합쳐 하나의 공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포장공사업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규모 반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날부터 국회와 전문건설회관, 국토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박영은 포장공사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는 배경으로 포트를 도로 파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등 포장공사의 전문화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처럼 전문성을 높여도 모자랄 때에 전문업종을 대업종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주행하는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임종폐지 철회

요구에 이어 공익관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건설산업 기본법(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에는 위험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정입법작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물협회가 김희창 법률사무소에 ‘건설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이 법제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다’.

김희창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소에서 ‘유지관리업자에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시설물안전법)’, ‘유지관리업자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교도육사법)’, ‘유지관리업자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기반시설관리법)’을

문제 삼았다.

이처럼 여러 관련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폐지하는 건설법 시행령 개정은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행사를 초래해 위헌적인 행정입법부작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통해 관련법을 정비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김희창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하위법령이 상위법률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률위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물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직업으로서 유지관리사업을 선택해 이를 수행할 직업 자유와 행복추진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 비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등 평등권을 위반하게 되는 만큼 전법소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창(지하철)@

“산재를 증가하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모두 하락”

산업안전보건법, 상정사 재우제표 분석... “산재예방, 비용 아닌 투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영성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우제표로 살펴본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 효과’ 연구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인당 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인당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11~2018년까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586개 기업의 공시 재무제표와 연구원에서 추출한 산업재해 발생자료를 결합해 분석했다. 산업재해가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경영적 효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재해가 생산 차질, 기업

이미지 하락, 노사관계 악화, 노동력 상실 등으로 이어졌지만, 경영실적과의 관계를 정량화한 시도는 국내 최초다.

우선, 산업재해율이 1% 증가하면 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약 12.5만~14.3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분석 대상 기업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인 7.7억의 약 2% 정도에 해당한다.

1인당 영업이익액은 매출액보다 더 크게 감소한다. 산재를 1% 증가 시 1인당 영업이익액은 21만~24.7만원 감소하는 데 이는 평균 영업이익액의 8% 정도에 해당한다.

영업이익이익률은 산업재해에 대한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재해율이

1% 증가할 때 111~1.2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대상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2.57%인 것을 고려하면 산업재해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매출액 성장률은 0.45~0.7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약 6.1%인데 비해 1% 증가하면 평균 성장률의 10% 내외가 감소하는 셈이다.

결국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직접 비용인 보상비용과 노동자 신규 고용, 간접비용 등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포함해 분석한다면 산업재해가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창(지하철)@

어촌뉴딜 경쟁률 ‘3.9대 1’... 지자체 236곳 신청

해수부, 내년 사업지 60곳 선정

노후 선착장 현대화 등 어촌지역 경주 여건을 개선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년도 대상지 공모에 4배 가까운 수모가 몰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 57개 시·군·구에서 236곳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에도 60곳을 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며, 경쟁률은 3.9대 1이다. 어촌뉴딜300은 어항 기반시설 현대화와 함께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하는 어촌재생사업이다.

지난해 첫 사업 대상지로 70곳을 선정했고, 올해는 120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 해수부는 내년에 50곳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예산안을 고려해 신규 대상지를 늘렸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어촌뉴딜300 예산은 총 5219억원이며, 여기에 60개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840억원이 포함돼 있다.

해수부는 이번 공모 경쟁률을 지난해 경쟁률 대비 1.5배 높여, 어촌뉴딜300에 대한 지자체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해수부는 수산과 어촌·관광,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 및 현장 평가 등을 진행하고, 오는 12월에 최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신규 사업지가 선정되면 어촌뉴딜300은 오는 2022년 이후 50개를 추가 선정하고 마무리하게 된다.

김정호 해수부혁신성장지원기획단 부단장은 “공정평가 결과를 통해 높은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창(지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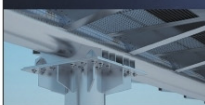
신승이엔씨
SHIN SUNG E&C

국토교통부 신기술 제846호 지정

NAVER 신승이엔씨



※ 사진은 신승이엔씨에서 직접 시공한 T타입 인도교 현장입니다.



영사동 다목적 해상교량 설치공사(1차)



소양강 신복주지 하천환경 정비사업



하계로 해안경관 향상을 조성사업(1차)

기획기사(2020.9.1.) - 산재를 증가하면,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모두 하락



2018년 5월,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는 만 64세의 형틀공이 내부비계 1단 (높이 2m) 작업발판에서 1층 작업자한테 유모차를 전달하기 위해 돌아서다 왼쪽 발을 헛디디 약 2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2018년 2월, 교실 증축 공사현장에서는 만 59세의 작업발판이 학교 건물 5층 외부비계 작업발판을 이동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이 탈락되면서 물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현장 비계 추락 사망사고 막을 ‘안전난간 선행공법’ 도입 서둘러야”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예방 방안 제시
안전난간 미리 확보해야 위험 최소화
“日 유령처럼 도입 법령 제정 시급”

“안전난간 선행(先行) 공법”이 건설현장의 비계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공법을 활용하면, 비계 설치 해체 등 비계 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은 반드시 안전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4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비계 안전난간 선행공법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추락재해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임시 가설통로 및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비계 구조물은 구성 부재를 하부에 상부 단계적으로 조립해 설치한다.

하지만 아래에서부터 조립해 올라가는 조립의 순서상 안전난간 설치는 작업 발판이 먼저 설치된 후에 이뤄진다. 따라서 작업자는 비계 사공방범상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해야 하고 추락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비계 관련 추락사고는 가장 빈번한 산업재해 중 하나다.

연구원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건설업의 중대재해 중 비계작업 관련 추락사망자 226명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해를 일으킨 기인분포는 △강간 비계 49명(41.6%) △달비계 34명(15.0%) △이동식비계 30명(13.3%) △작업발판 일체형 비계 28명(12.4%) △달비계 12명(5.3%) △시스템비계 5명(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비계와 시스템비계의 추락 사망자 총 99명을 작업종류별로 보면 △비계

위에서의 일반작업 60.6%(60명) △비계 설치 해체작업 27.3%(27명) △이동식비계 12.1%(12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계 위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은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설치불량(미고정 등) △작업발판 내부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설치불량(중간간대 미설치, 난간사이 간격 60cm 초과) △이동통로 미설치 등으로 안전난간이 없이 일정한 사각지대가 생긴다.

반면, 일본과 유럽 등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전난간 선행 공법을 도입해 안전성과 작업성의 효율성을 제고해 왔다. 일본은 2003년부터 후생노동성에서 ‘안전난간 선행공법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으며, 유관단체가 협력해 안전난간 선행공법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의 노력으로 사고사망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안전난간 선행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행 안전난간 공법은 경제성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일본 건설현장 기준으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선행 안전난간(교차가설, 1.5m) 설치공법은 후행 안전난간 설치공법 대비 약 7%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법은 아직 관련 근거가 없어 1.5m 선행안전난간을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개정해 교차가설(형)의 교차점이 바닥면에서 45~60cm 이내일 경우 중간간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난간 선행공법이 국내 건설현장에 도입되면 비계 설치 해체작업 중 추락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용기자 hyon@

‘기능인등급제’ 이어 ‘적정임금제’ 도입 가시화 ‘건설근로자’ 정책 이끄는 국토부

건설근로자 정책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근로자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최근 건설근로자 정책이 급변하면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내용이 늘어나고 있다.

4월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와 건설업계, 노동계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산정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르면 연내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별도의 최저임금이다. 다만 제도 도입이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될 우려가 큰데,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건고법 개정안을 보면,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가능액 적정임금을 정해 고시하

는 주체는 고용부장관이다.

하지만 실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산출은 국토부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기준은 시장노동 단가를 기반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앞서 국토부는 시장노동단가 조사 체계 변경 방안을 내린 중이다.

적정임금 고시는 고용부가 하더라도 적정임금 산정과 고시에 필요한 실무 작업은 국토부가 주관한다는 뜻이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설 기능인등급제도 국토부가 실제 관련 업무를 하도록 건고법에 명시됐다.

기능인등급제는 60개 내외의 건설 기능직종별 근로자를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다. 등급별 경력과 자격증 보유, 교육훈련, 포상 등을

총괄해 탄탄한 경력으로 결정된다. 기능등급 산정과 관리 업무는 국토부가 주도 맡게 된다. 고용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등급 산정에 필요한 자료 요청과 위탁 기관 지정 등의 권한을 국토부가 행사한다.

건설근로자 정책에 고용부가 아닌 국토부가 전면에서 나서 이유는 건설산업 전반을 다루는 국토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은 일반직인 제조업과 달리 고용부의 통상적인 근로자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온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다는 후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적정임금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 규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건설근로자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seck@

주안강건설
ENGINEERING & CONSTRUCTION

본사확장이전 제2의 도약

안양 디오리나

하반기 부문별 경력직 공개 채용

서류접수기간 : 2020. 9. 28 ~ 2020. 10. 12

다산 DINAMIC 타워

고산 한강빌레스

위향 라피아노

채용부서

- 건축사업본부
- 토목사업본부
- 경영지원본부
- 개발사업본부
- 마케팅본부

현장관리(공사, 공사) / 전기설비 / 분사공무

- 민간주주영업
- 세무회계
- 개발총괄(팀장급)
- 분양마케팅총괄(팀장급)

**채용관련 상세내용은
해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angangenc.co.kr

기획기사(2020.10.5.) - 건설현장 비계 추락 사망사고 막을 ‘안전난간 선행공법’ 도입 서둘러야

겨울철 건설현장 ‘난방기 화재·폭발’ 주의보

■ 올해 2월 부산 연제구 소재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내벽벽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상 1층의 내벽벽을 해체하던 중 주택이 붕괴되면서 근로자들이 배를 받았다. 준공 40년된 이 주택의 하중을 버티던 내벽벽을 먼저 철거한 후 조적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다. 겨울철 낮은 기온 탓에 발생한 굴절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결기가 확산에 다가오면서 정부와 발주기관, 건설업체가 모두 긴장하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겨울철 특성에 맞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상 1층의 내벽벽을 해체하던 중 주택이 붕괴되면서 근로자들이 배를 받았다. 준공 40년된 이 주택의 하중을 버티던 내벽벽을 먼저 철거한 후 조적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다. 겨울철 낮은 기온 탓에 발생한 굴절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체 재난 사망자는 줄었지만 동결기 3개월은 안전사고 줄지 않아요

전날까지 사용 많아서 사고 등 빈번
고용부 내달부터 800곳 '불시' 감독
국토부도 966개 현장 안전점검 나서

겨울철 동결기 3개월간 사망자 수 감소세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도 "동결기 현장 가동률은 평소의 50%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중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결기(2019년 12월~2020년 2월) 기준 건설업의 동결기 발생형태별 재해 현황을 보면 △떨어짐 △넘어짐 △막을 등 순으로 '넘어짐' 등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화재나 폭발, 질식으로 인한 사고

가 동결기에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동결기 사용과 관련 있다"며 "동결기 사용 시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동결기를 앞두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의 대량 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9일부터 한달간 전국 800여곳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화재나 폭발, 질식으로 인한 사고

회이다.

이날 감독은 난방을 위한 열원 기구 취급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동결기 사용 시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2일부터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동결기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동결기 사용 시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안전 기자 kwon88@

건설안전 우리가 지킨다

현대건설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역량 증대 1000억 이상 투자 최적 현장 구현

현대건설은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계층별 안전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안전관리 강화방안은 △안전 인력 운영 혁신 △안전비 투자 확대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안전 현장별 인력 운영에서 벗어나 본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정규직화해 안전관리 역량을 증대한다. 또한, 현장에 부임하는 직책자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

역량 증대 위한 교육, 관리, 인센티브 등 3축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증대한다. 또한, 현장에 부임하는 직책자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역량 증대 1000억 이상 투자 최적 현장 구현

현대건설은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계층별 안전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전 인력 운영 혁신 △안전비 투자 확대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안전 인력 운영에서 벗어나 본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정규직화해 안전관리 역량을 증대한다. 또한, 현장에 부임하는 직책자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역량 증대 1000억 이상 투자 최적 현장 구현

현대건설은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계층별 안전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전 인력 운영 혁신 △안전비 투자 확대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안전 인력 운영에서 벗어나 본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정규직화해 안전관리 역량을 증대한다. 또한, 현장에 부임하는 직책자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

건설기계종사자 81% "고용보험 가입 원한다"

고용부, 특고 14개 직종 설문 87% '보험료는 절반씩 부담'

건설기계종사자 10명 중 9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시 사망자의 근로자가 50%로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4개 직종 3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8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중차 기사 92.6% △대형자동차 운전기사 92.1% △건설기계종사자 81.0%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

로자 87.2%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했고, 400명 이상은 80.6%로 비교적 적은 수준이었다.

고용보험료 부담 분담 비율은 전 직종에서 '사업주와 종사자가 동일하게 부담'을 응답한 비율이 87.3%로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현재 일하는 종사자간 조사 결과 '연 100만 원'이 52.9%로 가장 많았다. 1~2년은 14.6%, 3~5년은 12.6%, 2~3년은 11.6% 등 순이었다.

건설기계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종사자 비율이 27.6%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14개 특고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이 45.9%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미만은 34.0%로 뒤를 이었다.

기술혁신연구소 INNOBIZ-ex
www.slope.co.kr

당신의 안전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1986년

앵커정착장치의 비밀 해결
고장력 O-NET(낙석방지, 토석류포획망)
국산화 완성

대표 방법

- SAP
- 고장력 낙석방지 및 토석류 포획망
- 인식기술
- 앵커-지반보강
- 낙석시합
- 고장력 앵커장치
- O-NET 설치

국내에서 개발하여 해외공법에 적용된
국내 유일의 기술 수출 영커

시공시 발생하는 크리프와
장착부 슬립임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가능한 신기술
'압축복합형 영커'

압축복합형 영커

시공시 선형변형률(1/1000)

(주) 동아특수건설

본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대림테크노사 3차 814호)
TEL. 02-2107-7100 FAX. 02-2107-7105

공장 경기도 화성시 봉암읍 덕유로2길 85-8
TEL. 031-298-0176 FAX. 031-298-7176

강원 강원도 원주시 삼지대길83(백사정삼거리 2층 206호)
TEL. 033-731-2107



카드뉴스 - 건설현장 추락사고 비계·작업 발판 안전불감증



카드뉴스 - 건설현장 추락사고 비계·작업 발판 안전불감증

● 사업명

당신은 오늘 '안전'하십니까
산업재해 사고사망 예방 기획취재

● 실적

기획기사 3회, SNS 콘텐츠 제작 1회
캠페인 홍보배너 게재, 안전 캠페인 광고 게재

● 내용

- 기획기사(2020.07.07.) 19면
 - 베테랑 부장도 안전 앞엔 신입사원...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72일 “제2의 김용균 사고는 없다”
- 기획기사(2020.09.18.) 12면
 - 안전이 돈이다...기업 산재율 1%만 올라도 경영에 치명타
영업이익률 1.2%p 떨어지고 1인당 매출액 1400만원 감소
기업들 산재 예방 투자 늘려야
- 기획기사(2020.11.10.) 12면
 - 공사장 사망 절반이 추락사...안전대책 고삐 틀어진다
산업안전공단 예방 대책 추진

국민일보 2020년 7월 7일 화요일

기획

19

“베테랑 부장도 안전 앞엔 신입사원”... 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국민일보·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

작년 산업재해 사망자 12% 감소
통계 집계 21년 내 최대 폭 감소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절반 감축”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단위율은 처음 0.4(퍼밀라드·노동자 1만명당 사망률)대로 내려앉았다. 노사정 협력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좁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6월 ‘산업 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산재 예방 유공자를 포상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산업현장, 산업(건설)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등 총 82명이 수상했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7월 ‘100일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역량을 모았다. 사고가 많은 중소기업 건설현장은 불시 순찰점검 중심의 패드를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런 노력은 긍정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이재갑 장관·산재예방 유공자 기념 촬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월 열린 ‘2020년 산재예방 유공자 기념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예방 유공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7월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전년 대비 116명(11.94%) 줄었다. 1999년 사고사망자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또 사고사망단위율은 2018년 0.51에서 0.46로 감소해 사상 처음 0.4대에 진입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전문가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날 동남산업 회장을 받은 정미경 한국방송공사 보건관리자는 30년간 노동자 건강증진 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마

스크 2만1000개를 직접 사 방수 제작 현장의 파견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 철강산업회장을 수상한 건설협회 한라의 박성일 회장은 장의적인 산재 예방을 실시해 2015년 이후 무재해 성과를 거뒀다. 석탄산업회장을 받은 우중원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표는 700이 넘는 나이에 불구하고 영세사업장 520여곳에 부작업 위험 기계 교체, 간단 보수 등 무상서비스를 제공했다.

산업회장을 수상한 박철우 성동공업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연도	사고사망자(명)	사고사망단위율(%)	사고사망자증감률(%)
2010년	1114	0.78	-
2011년	1129	0.79	1.34
2012년	1134	0.73	0.44
2013년	1090	0.71	-3.88
2014년	992	0.58	-8.99
2015년	955	0.53	-3.72
2016년	969	0.53	1.46
2017년	964	0.52	-0.51
2018년	971	0.51	0.72
2019년	855	0.46	-11.94

*사고사망단위율: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태희 SK건설 주임은 2002년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현장을 누볐다. 안전시설물의 설치, 공도구 및 장비 점검, 위험요소 등을 찾아내며 호랑이 감독관 역할을 했다. 박현철 GS동해전력 대표(대표이사)는 안전팀을 본

인 직속으로 개편하고 매년 안전분야 예산 약 5억 원을 별도로 수립했다. 발전소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안전사령관으로 발간해 협력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정규 한국종합안전 대표(대표이사)는 열악한 중소기업현장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기술지도·노무 서비스를 지원했다. 안전보건과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건설안전관리사·LS’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이자 최우선의 가치”라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choi@kmb.co.kr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72일 “제2의 김용균 사고는 없다”

원청 시공사 안전 책임 강화
유해·위험 큰 도급작업 금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6월로 시행된 지 172일이 지났다.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 시공사의 안전 의무 책임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총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

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2016년 서울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하행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15일 약 30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산안법은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 종사자를 포함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특히 종사자에게는 휴게시설 구비·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했고, 태백기타·대리운전 기사 등 5개 직종은 노무 제공 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산안법에 예방 책임 주체도 확대했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 산안법으로 원청에 책임을 묻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책임자인 원청 현장소장과 협력사 대표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것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다단계식 하청 구조로 사망사고 시 모티브로 일관하던 시공사 등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 산안법은 유해·위험하

른 도급작업 등을 전면 금지했다. 생산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작업은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범위는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강화 등 법 취지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84호

보상 계획 공고

〈토 지 조 서〉

■ 공사명 :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연도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소유자		
1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2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4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5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6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7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8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9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0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1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2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4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5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6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7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8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9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20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 토지소재지 및 면적: “물리조사”
※ 토지 및 물리조사에 관한 상세정보: <http://www.molit.go.kr> - 알뜰마당 - 국토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됨

5. 발령 및 이의제기기간: 2020. 7. 7. ~ 2020. 7. 21.

6. 발령 및 이의제기기간: 2020. 7. 7. ~ 2020. 7. 21.

7. 보상시기 및 절차: 2020년 7월 중 보상금의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금도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주무 관청을 통해 확인한다.

8. 보상금의 지급: “물리조사”
- 보상금에 대한 “물리조사”를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사립평가업자, 관공평가업자,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선정)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의거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9. 본 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033-769-57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연도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소유자		
17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8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9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20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1/3	양구시천 양구지구 하천정수정 정비사업	21	21-15	3,679	1,211

합계: 2020년 7월 7일

안전이 돈이다... 기업 산재율 1%만 올라도 경영에 치명타

영업이익률 1.2%p 떨어지고
1인당 매출액 1400만원 감소
기업들 산재예방 투자 늘려야

산업재해와 기업의 경제력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재해율이 1.0% 증가할 때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최대 1.2% 포인트 하락하고 노동자 1인당 1400만원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한 '재무제표로 살펴본 기업의 산재 예방 투자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산업재해율이 1.0% 증가하면 노동자 1인당 연 매출액은 약 1215만~143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석 대상 기업 1인당 평균 매출액(약 7억9천만원)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구원은 2011~2018년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58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산업재해와 기업의 경영성과 연관성을 밝혀냈다. 연구원은 산업재해가 노동자 1인당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산업재해율 1.0% 증가 시 1인당 영업이익액은 약 211만~247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자 1인당 평균 영업이익액(약 3000만원)의 8.0% 수준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매출액 감소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능력 저하는 기업 전반의 경제력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재해율이 1.0% 늘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11~1.21% 포인트 감소했다.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57%인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같은 조건에서 매출액 성장률은 0.45~0.71%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2018년 6월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율이 증가하면 기업의 경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국내 최초로 발표했다.

추진했다. 연구원은 "분석 대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약 6.1% 수준으로 재해율이 1.0% 증가하면 평균 성장률의 약 10.0%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이렇듯 재해율은 해당 연도 경영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매출액·영업이익액뿐만 아니라 매출액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노동력을 상실케 하는 것은 물론 생산 차질, 기업 이미지 하락, 노사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급기야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1984년 인도 화학 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370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미국 다국적기업 유니온 카바이드와 1995년 2-브로모프로판 사용으로 노동자 20명이 생식독성장해를 앓게 한 국내 1기업은 민형사상 책임, 직간접적 손실액 발생, 노사 갈등 심화 등으로 사업장을 모두 폐쇄했다. 애플의 경우 워터

기업의 산업재해율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률 분석 결과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에서 고강도 노동 환경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늘자 소비자 불매운동이 확산했고 이는 애플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다.

박선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즉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상이었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포함해 분

석한다면 산업재해의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다. 기업의 안전 의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멈추지 않는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국내 노동자는 매년 1000여명에 이른다. 산업재해 예방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올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는 47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다. 1~49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366명(77.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188명·40.0%)가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가 잦은 업종은 건설업(254명·54.0%)과 제조업(97명·20.6%) 순으로 나타났다.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178명·37.9%)가 절반에 가까웠고 끼임·부딪힘·화재 및 폭발사고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재해자 수는 5만1797명으로 0.3%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산업안전 제도 보완과 위험 사업장 점검 점검 등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16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법) 전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 시공사의 안전 의무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가 산안법을 전부 개정된 것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공·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설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건축 자재의 화재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 노동 전문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뒤처지는 중소기업의 자금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첨단 기술력으로 극복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재해 발생은 사고 보상 비용이나 신규 노동자 고용 같은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인 매출액과 같은 기업의 지속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는 기업이 사업장 내 산재 예방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전 문화를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choi@kmb.co.kr

국민일보-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기획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

함께 손잡고 걷면
일상의 소중함을 이겨서야 배웁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손을 맞잡은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한국전력 KEPCO



기획기사(2020.09.18.) - 안전이 돈이다...(12편)

공사장 사망 절반이 추락사... 안전대책 고삐 틀어진다

산업안전공단 예방 대책 추진

올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산업재해 노동자 254명 가운데 절반은 추락에 의한 사고로 파악됐다. 특히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연말까지 '무늬만' 안전지대인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안전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강도 높은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추락-사망' 악순환의 연속

9월 고용노동부와 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명 늘어난 470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건설업에서는 25명이 증가했다. 6월까지 건설업에서 사망한 25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26명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건설업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69명으로, 매년 27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전년(855명)보다 130명 이상 감소한 725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도 불투명하다.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는 매달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서울 신축공사 현장의 건물 외벽 7층 높이에서 유리창 실리 관련 작업을 하던 A씨가 추락해 사망했고 5월에는 경기도 안양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을 설치하던 B씨가 3층 높이의 철강 자재 구조물(H빔)에서 발을 헛디뎠다며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 지난 4월에는 부산 오피스텔 공사장 지상 1층에서 작업 중이던 C씨가 지하 1층으로 뚫히는 개구부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패트를 점검반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254명 가운데 추락에 의한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다.

올 126명-중소 현장 80% 차지 올 현장 점검 목표 6만곳으로 늘려 안전설비 구축 3000만원 지원

건설현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의 안전관리가 취약했다.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자 126명 가운데 12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1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50억 원 미만 현장의 사망사고가 103건이었다. 최근 5년간 120억 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사망자는 1088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은 대규모 현장보다 안전관리가 미약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패트 점검 목표 2배 확대
공단은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사 규모 12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대한 패

트를 강화하고 불량현장에 대한 행정 조치 실시율을 높이는 등 연말까지 건설업 사고 감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현장점검 목표는 2배로 확대했다. 연초에 3만곳의 현장을 점검기로 했던 목표를 6만곳으로 늘린 것이다. 또 불량 사업장이나 개선조치 불이행 현장을 고용부 감독과 연계하는 행정조치 연계율도 3%에서 4%로 높였다.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미착용 등 추락위험 요소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 순찰점검의 기동성과 신속성을 강화했다. 공단은 패트를 전용 차량 32대를 일선 현장에 추가로 투입해 총 50대의 차량을 운영한다. 패트를 전용 차량을 이용해 순찰점검 지역을 확대하고 건설현장 밀집 지역 순찰 시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방송을 병행해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량에 화재·폭발 예방 장비를 갖춰 건설현장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9월 말까지 2만5000여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3만2000여회 순찰점검을 했다"며 "이 가운데 1250곳은 고용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전설비 구축에 최대 3000만원 지원

공단은 연말까지 504억 원을 투입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력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건설현장 비용 지원 규모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체형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과 안전망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일체형 작업 발판은 설치면적별로 정액 지원하고 안전망 구매비용은 공사금액별로 차등 지급한다. 동일 사업주당 연간 건설현장 3곳까지 지원 가능해 공사 규모가 2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최대 6곳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화재·폭발 예방설비를 적극 지원한다. 공단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등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 팬·용접작업 불연포·비상대피유도선 등 구매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건설 실무경력이 현장에 투입돼 순찰을 강화하는 대책도 눈에 띈다. 공단은 건설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 400명을 '건설안전 지킴이'로 선발해 상시 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2인 1조로 투입되는 지킴이는 추락사고와 화재·폭발 위험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순찰 활동은 9월 말 기준 6만5000회 실시했다.

이밖에 공단은 사망사고 감축에 대한 현장의 동향을 유도하고 재해 감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설안전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위험현장 사업주와 관리자 대상 집중교육도 병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패트를 방식의 순찰점검은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위험요인을 알려주고 개선을 유도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rai@kmb.co.kr

국민일보-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기획

잘 들리는 고음질 기도형 보청기 SQ10



SQ 10 보청기는 저렴한 가격, 우수한 성능, 자연스런 소리,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국내제조/국산 보청기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보청기를 선물하세요!”

다양한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

- ▶ 노인성 난청 ▶ 소음성 난청
- ▶ 대화 할 때 ▶ TV 시청 할 때
- ▶ 휴대폰 통화할 때 ▶ 강의 들을 때



대화, TV, 전화, 강의가 잘 들립니다 ^^

SQ 10 보청기 특징과 장점

1. 간편하게 사용하는 충전식
5. 내청력에 맞게 간단한 볼륨조절

2. 양쪽용 이어폰을 통한 양방향통화
6. 빠른 소리 등 잡음이 적음

3. 편리한 사용법
4.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7. 국내제조제품 (Made in KOREA)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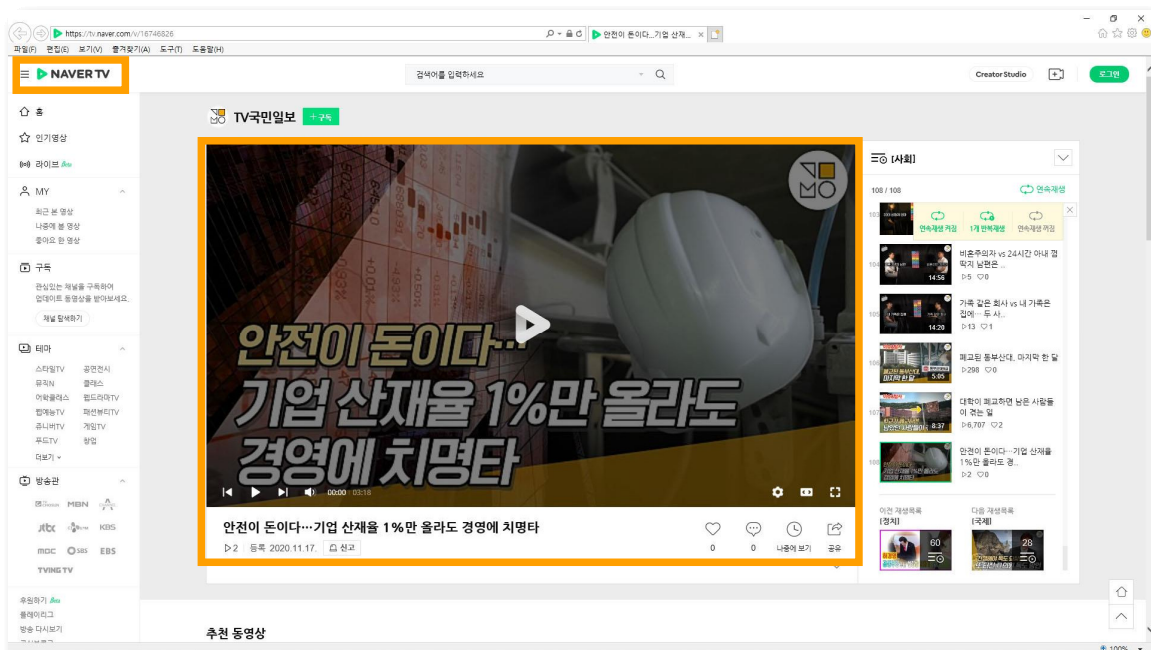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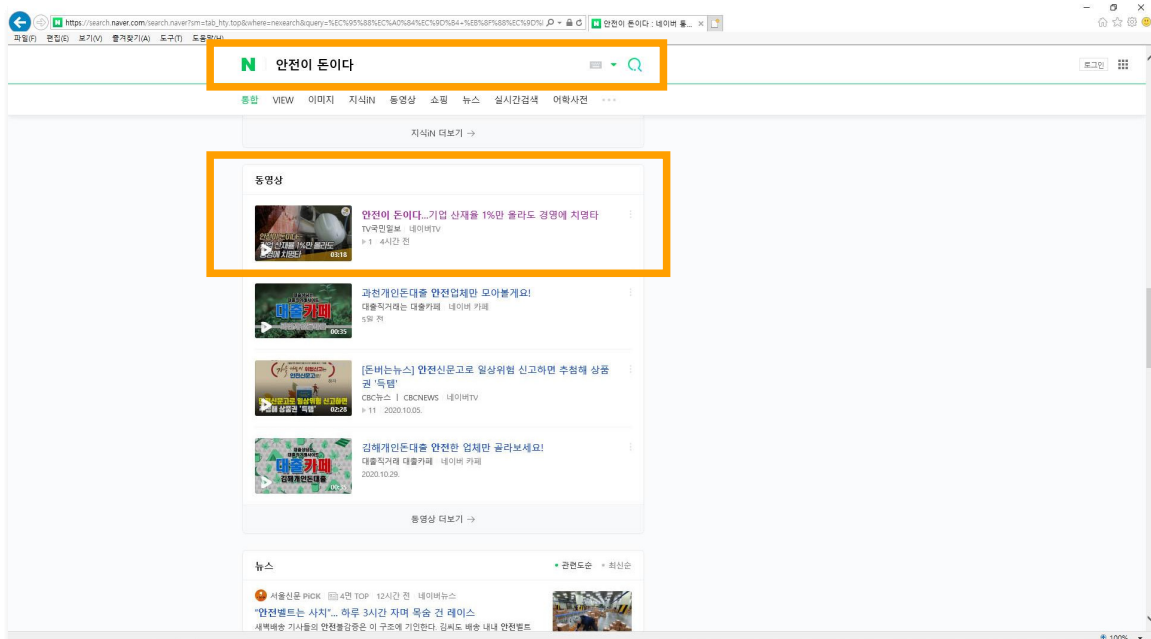
광고심의번호: 2020-GN1-06-0006

판매원: 비전케이(www.vj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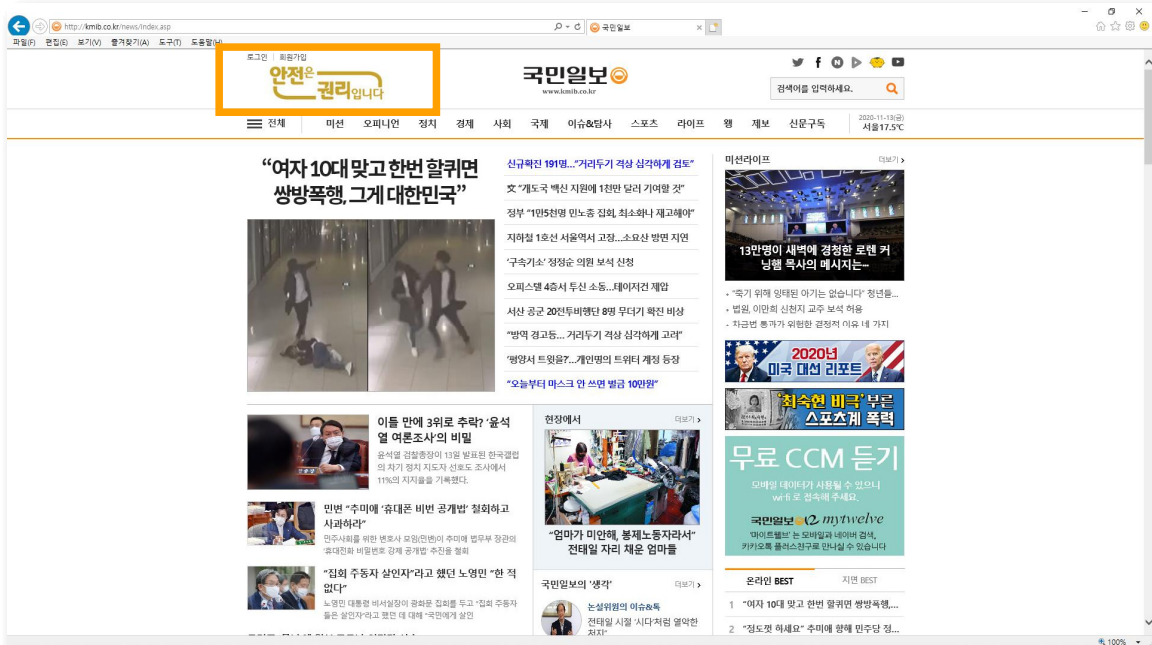
통신판매 신고번호: 2014-서울영천-0287호
농림: 302-1237-5704-61 비전케이(배화형)

대리점 및 취급점 문의: 02)2168-3515

구입문의 02-2168-3844



영상콘텐츠(3분18초) 2020.11.17(화) Naver 게재. 포털 검색 시 콘텐츠 노출





↓ **선제 사고예방**
행동으로 줄입니다

건 설 현 장

설치하고

안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추 락 사 망

착용하면

개인보호구

막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illegible][illegible]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설치하고착용하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듭니다 작업자 보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흥노동부

GS엔지니어링
안전보건공단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설치하고 착용하면

안전한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효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추락사망 안전캠페인 5단광고 게재 2020.07.29(수) 2020.08.29(토)



안전 대한민국 캠페인 5단광고 게재_2020.09.24(목)_2020.10.07(수)

● 사업명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 실적

기획기사 4회

● 내용

- 기획기사(2020.05.29.)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①
사법부 ‘관대한 처벌’, 예방효과 없다 (1면)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①
선택과 집중으로 산재 사망사고 줄인다 (18면)
 - 정부, 사법부에 산재사고 처벌 강화 요청 (18면)
- 기획기사(2020.06.26.)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②
‘재래식 재해’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부터 줄여야 (16면)
 - 선진국은 추락사고 어떻게 예방할까 (16면)
- 기획기사(2020.08.07.)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③제2의 김용균 만든 막자
지난해 제조업 산재사망자 32% ‘끼임사고’가 원인 (18면)
 - 건설업에서 효과본 패트롤, 제조업으로 확대 (18면)
- 기획기사(2020.08.28.)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④움직이는 흥기, 지게차 사고를 막자
무면허에 기본 안전수칙 안 지켜 연간 20여명 사망 (18면)
 - 3대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 줄인다 (18면)

18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정 책

내일신문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①

선택과 집중으로 산재 사망사고 줄인다

산업재해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요구
중대사고·사망사고부터 막는 게 중요
전체 사망자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

1. 지난 4월 29일 경기 아산시 물류창고 산화공기 현상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공사현장 내 유해물질 작업 중에 발생한 유증기(기름 증기)와 열라에터 설치 작업 중 불꽃이 결합해 순식간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불꽃 40cm 정도의 폭을 찾아낸 2008년 아산시 노동청과 화재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창고 지하에서 57명의 노동자가 전기 배선 설치와 냉방 작업을 하던 중 전기 기동기를 위해 불꽃이 순간 사고 중대 사고였던 유증기가 폭발해 사고로 이어졌다.

2. 지난 1월 일원 건설인도시 한 건설현장에서 20대 일용직 근로자가 70m 높이의 구도를 위에서 지상 3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아파트 외벽 외벽에 성벽을 개조한 채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른바 '중대사고'로 인한 국민불안감이 커졌다.

전통기술은 산업재해 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이나 관련법 제정 조처에 사내에 나서는 기존 방식에 의존해 왔지만, 이들은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나쁜 사고'만이라도 막고자 요구해왔다. 나쁜 사고란 '중대'와 '사망'을 수반하는 사고를 지칭한다.

이런 사고와 전통기술의 지극히 문명적일수록 정확도, 수명, 안전을 위한 노력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산업재해는 일관성 없는 사고로 나타났다.

5년간 제조업 재해현황별 사고사망자 현황(단위:명)

구분	합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합계	881명	399명(45.3%)	209명	111명	105명	97명	287명
50인 미만	654명	249명(38.1%)	165명	93명	71명	76명	191명
50인 이상	227명	110명(48.4%)	44명	18명	34명	21명	96명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고사망자 현황(단위:명)

구분	합계	50억 미만	50억~100억	100억~500억	500억 이상
합계	847명	688명(81.2%)	154명	78명	78명
사망자	847명	688명(81.2%)	154명	78명	78명



치명적 화재 현장 4월 29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57연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을 수습중인 소방차가 출동하고 있다.

구분	유해물질(%)	일(%)	목(%)	미(%)	영(%)
사고상 사망자	0.46	0.13	0.09	0.31	0.08

최근 3년간 업종별 사고사망자 현황(단위:명)

구분	합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
합계	2,904	1,490(51.3%)	658	756
2016년	2,969	1,499	232	238
2017년	964	506	209	249
2018년	971	485	217	269

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에서 안전을 선택적으로 중대사고와 사망사고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산재예방 목표를 '사망사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국민들이 보낸 신호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변화는 인식·문화 한계라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근 1년 동안 근로감독관 1100여명 늘렸다. 그럼에도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2018년 기준)는 148개, 노동자는 1만5331명에 달한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일반 근로감독관의 절반 수준이다.

4.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5.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6.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구분	합계	유해물질(%)	일(%)	목(%)	미(%)	영(%)
합계	1,490	847(56.8%)	142	99	93	226
2016년	499	281	47	32	32	81
2017년	506	276	47	43	38	80
2018년	485	290	49	24	23	85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 발생현황별 통계(단위:명)

구분	합계	유해물질(%)	일(%)	목(%)	미(%)	영(%)
합계	1,490	847(56.8%)	142	99	93	226
2016년	499	281	47	32	32	81
2017년	506	276	47	43	38	80
2018년	485	290	49	24	23	85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 발생현황별 통계(단위:명)

구분	합계	유해물질(%)	일(%)	목(%)	미(%)	영(%)
합계	1,490	847(56.8%)	142	99	93	226
2016년	499	281	47	32	32	81
2017년	506	276	47	43	38	80
2018년	485	290	49	24	23	85

7.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8.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9.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산재 사망자들을 추모합니다' 4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산재사망대피로연공제재단 주최로 열린 '2020 직역의 삶(가)를 선행' 기자회견에 산재 사망자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이 놓여 있다.

10.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11.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12.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13.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14.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15.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16.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17.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18.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19.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20.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민을 수 없는 현실 5월 1일 경기 아산시 물류창고 화재현장에서 마련한 아산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을 수습중인 소방차가 출동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 발생현황별 통계(단위:명)

구분	합계	유해물질(%)	일(%)	목(%)	미(%)	영(%)
합계	1,490	847(56.8%)	142	99	93	226
2016년	499	281	47	32	32	81
2017년	506	276	47	43	38	80
2018년	485	290	49	24	23	85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 발생현황별 통계(단위:명)

구분	합계	유해물질(%)	일(%)	목(%)	미(%)	영(%)
합계	1,490	847(56.8%)	142	99	93	226
2016년	499	281	47	32	32	81
2017년	506	276	47	43	38	80
2018년	485	290	49	24	23	85

21.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22.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23.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24.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25.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26.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27.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28. 산재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은재정비 후 돌봄 이후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나면는 곳 △사업장에 정확히 파악한 후, 총괄, 통계를 3년 이내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나쁜 사고가 자주 일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사태를 단계별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업종을 집중해 '명장순찰 점검(페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2018년)에 비해 인명에서 감소했다. 페트 점검 방식의 사업장별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기획기사(2020.5.29.)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①

선택과 집중으로 산재 사망사고 줄인다 (18면)

- 정부, 사법부에 산재사고 처벌 강화 요청 (18면)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②

‘재래식 재해’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부터 줄여야

‘산재사망 절반 감축’ 목표 달성의 ‘열쇠’
정부, 안전설비 지원예산 확대하고 기획점검 강화

2019년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고사망 재해현황		*재해율(%)				
구분	40억 이하	40억 초과 500억 이하	500억 초과 1,000억 미만	1,000억 초과 5,000억 미만	5,000억 이상	분류
사고사망률	404건 %	266건 100%	175건 66.8%	32건 8.2%	22건 5.4%	분류
			15.1%		1.5%	

[illegible][illegible]

한수고급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임

(사) PRCO

"아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구자열 회장(수강자)의 후견으로 자식들의 이름 위에 부친의 수도 레온이 바깥에 붙었다.

17년 33%)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3년 14.1%에서 2017년 16.7%로 2.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10% 미만인 업종은 10개 업종 중 4개 업종(40%)이 20% 미만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소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25% 이상인 10개 업종 중 7개 업종(70%)이 20% 미만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소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25% 이상인 10개 업종 중 3개 업종(30%)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20% 이상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소한 영향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20% 이상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소한 영향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20% 이상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소한 영향을 받았다.

안녕반갑고난 관계는 "소극" 건설협회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부록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어렵다"며 "우식 사고가頻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비밀지나"로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페트를 방식 기획점도 병행
안전진단공단은 안전협회를 불러서
회차가 지도하는 페트를(순환) 방식
의 특징과 기획점도 안전 인증 심사의
자재와 하반기 건설공사 특별기획
점 검토, 전년도다 건설공사 사
자를 57명 대상으로 데 가져다

● **경제 지원에 대한 수요** - 사업이 열릴수록 월 임대료도 증가하며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노동비용 또한 비싼데 50여만 원의 월임대료로 10여만 원의 월임대료로 운영이 가능하고, 차라리 임대료를 낮추고 운영한 것보다 스타벅스에 임대비용을 연봉 700만 원으로 지원하면 더 나은데, 현재는 554억 원으로 지원, 2019년에는 728억 원으로 지원한다. 스타벅스에 임대료를 줄 경우 30만 명을 초과할 200만 명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금 200만 명을 초과할 200만 명을 지원한다. 200만 명을 초과할 200만 명을 지원한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북쪽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도시 주교 10배'에 한 전드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전시한 제품들 중 하나인 네트워크 케이블이 꽂혀 있는 모습이다.

[illegible]

◆ **업제·노동자 안전의식 강화 필요**
정부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건설사와
중소건설업체의 안전의식도 높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
월 고용노동부가 추락 사망사고 위험
이 높은 중소기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심한 기회감독 경보를 발표했지
만, 작업자인 민간에서는 시름 모르는
정도는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심한 경정조로 계약 공사비가 많
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사자
단속을 포함해 안전 관리로 수주
맞추거나니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
고 안전의식과 경비를 외면한다"고
했다.

[illegible]

고령노동부가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이언트 강도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재해예방
공통기회: 안전보건공단

선진국은 추락사고 어떻게 예방할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례연구보고서
미국·영국·독일·싱가포르·일본 사례

[illegible][illegible]

10월 모든 공공공사 설계와 계약에서 재래식 강관 비계 사용을 금지하고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재래방지에 대한 규정을 개정, 특별교육을 추가했다.

복합은 새로운 에너지개발인 능동형 추력방지시스템, 수평안정대 부속식 비, 슬랩터 가부집 조립 시 추력자극 제방시스템을 사용한다. 복합은동형 추력방지시스템에는 안전대와 안전 대 부속식비를 활용에 노동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는 활동제한안정대와 추력의 높이를 제한에 노동자를 보호 하는 추력자극시스템이 있다. 또 새로운 추력위험방지시스템을 개발해 기존적인 평가와 안전도를 수치화해 상대적인 위험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세홍 기자 sojang@nseil.com

산업경제연구원
공동기획: 안전보건공단

Three construction workers wearing white hard hats and blue safety vests are working on a building structure. They are positioned in front of a wall covered with blue insulation panels. One worker is standing on a higher level, while the other two are on the ground. The background shows a concrete wall and some construction equipment.

기획기사(2020.6.26.) -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②

‘재래식 재해’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부터 줄여야 (16면)

- 선진국은 추락사고 어떻게 예방할까 (16면)

● 사업명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 실적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 12회

● 내용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5.28.)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① 의미와 개요]
김용균씨 산재사망 계기로 28년 만에 전부 개정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6.11.)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② 핵심내용]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6.25.)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③ 사업주 의무 및 민·형사 책임]
산안법 상 주된 의무주체는 '사업주'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7.09.)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④ 근로자와 보호대상자]
특고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확대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7.23.)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⑤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8.06.)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⑥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관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의무주체 확대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8.21.)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⑦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책임자는 사업주 (18면)

● 내용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9.03.)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9.17.)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⑨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와 행위자 동시 처벌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09.29.)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⑩ 유해·위험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
사업주, 유해·위험 방지위한 안전·보건 조치해야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10.15.)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⑪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의 주요한 수단 (18면)
- 개정산업안전보건법해설(Q&A)(2020.10.30.)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 ⑫ 산업안전 근로감독 대응]
근로감독관은 노동법령 사법경찰관 (19면)

18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정 책

내일신문

“불법의료는 의사 부족에서 비롯된 것”

보건의료노조 “간호사·PA(진료보조인력)가 의사업무 대행 만연” ... “의대정원 확대 반대의 환자 안전위협”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의사의 고 유 업무인 수술 시술 처치 환자부담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등차서 설명 등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고, 의료현장에는 대다수술과 대리 처방, 대리초진 등 의사와 의사의 고 유업무인 수술 시술 처치하는 불법의료자가 병행하고 있다.” 코로 나19 확진세례 선 대현민국 간호사들의 나일병원 정년퇴직.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의사부족을 위한 불법의료 현장을 고발하고 “의사인력 부족, 공공의대확립 실패”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3층 회의실에서 부속인 의사인력인력 부족을 위한 불법의료 현장을 고발하고 “의사인력 부족, 공공의대확립 실패”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3층 회의실에서 부속인 의사인력인력 부족을 위한 불법의료 현장을 고발하고 “의사인력 부족, 공공의대확립 실패”를 주장했다.

진 의사가 연결 안되는 야간 시 의사를 대신한 당직근무자의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업무공백을 메우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전경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인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의 당직 근무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PA간호사의 의사업무 대리 행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스 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인력에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한 업무가 전가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스 진료보조인력만으로는 의사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 데 부족하다. 스 의사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 데 부족하다. 스 의사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 데 부족하다.

원청 사내복지기금 하청업체 지원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청 대기업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공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규제완화와 제도정비를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등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복지 강화에 위해 노동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1월 도입됐으나 설립·운영을 위한 규정·제도의 미비, 정직원 기금 등에 대한 자리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공공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입법으로 제정된 바 없다.

우선 개정안은 또 공공근로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기금의 예산을 하

급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존 금융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제한했지만 정부는 이를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탈퇴 및 재산출의 범위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앞으로 필요시 일정 절차를 거쳐 공공근로 참여에 탈퇴할 경우 해당 기금이 출연 비준의 재산을 해당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공공근로에 참여한 기업에 사업이 종료되면 탈퇴할 경우 해당 기금이 출연 비준의 재산을 해당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및 청문회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함나나는 예술여행’ 특별 순회 전시 시작

문체부·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10주 동안 ‘함나나는 예술여행’ 특별 순회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15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인다. ‘함나나는 예술여행’ 취지에 걸맞은 이화나 작가와 박현미 작가(작가)가 작품을 후원한다. 이 작가는 “다시 시작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동·서양의 대표 고전 회화를 묶은

작품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해 의료진과 병원을 찾는 모든 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한다. 박현미 작가(작가)는 “다시 시작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동·서양의 대표 고전 회화를 묶은

작품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해 의료진과 병원을 찾는 모든 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한다. 박현미 작가(작가)는 “다시 시작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동·서양의 대표 고전 회화를 묶은

문체부와 문체위는 오는 12월까지 전국 광역권 전당현관과 지도시설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를 확충 전시, 비대면 공연 등 ‘함나나는 예술여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진, 사무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www.culture.go.kr) ‘집콕 문화생활’에서 온라인 전시를 비롯해 ‘가이드’ ‘소유·휴식’ ‘여행’ ‘드림’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이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일온라인을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수업 때 저작물 이용 편리해진다

개정 저작권법 5일 시행
분쟁에 직권조정제 도입
원위탁, 등록 법적 추제로

디지털 교과서 등의 이용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저작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2월 공포돼 5월 시행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령에 따라 교육 분야에 관련된 저작권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개정 저작권법에는 원위탁 제도가 신설된다. 원위탁이란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저작물을 원저작자에게 위탁하여 저작물을 창작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위탁은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저작물을 원저작자에게 위탁하여 저작물을 창작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저작자가 저작물을 원저작자에게 위탁하여 저작물을 창작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위탁은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저작물을 원저작자에게 위탁하여 저작물을 창작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 | ⑥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관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의무주체 확대

건설업은 산업안전의 최고 위험 분야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특히 건설업에 대한 관리의 구체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설업에 적용되는 개정법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를 총 공사금액에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까지 확대했다.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를 감소방안을 포함 한 기반안전보건대상을 작성할 수 있다.

건설업에서는 기반안전보건대상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상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계자는 안전보건대상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조치체제 강화

개정법은 산업안전의 안전보건조치체제를 강화했다. 종래에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 규모가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피해를 감축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관리자 대상이 종래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로 제한됐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 외에도 관계수급인까지 기술수급인의 분과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나 건설공사기 지원자는 사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조치체제 강화

개정법은 산업안전의 안전보건조치체제를 강화했다. 종래에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 규모가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피해를 감축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관리자 대상이 종래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로 제한됐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 외에도 관계수급인까지 기술수급인의 분과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나 건설공사기 지원자는 사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조치체제 강화

개정법은 산업안전의 안전보건조치체제를 강화했다. 종래에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 규모가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피해를 감축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관리자 대상이 종래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로 제한됐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 외에도 관계수급인까지 기술수급인의 분과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나 건설공사기 지원자는 사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조치체제 강화

개정법은 산업안전의 안전보건조치체제를 강화했다. 종래에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 규모가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피해를 감축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관리자 대상이 종래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로 제한됐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치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 외에도 관계수급인까지 기술수급인의 분과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나 건설공사기 지원자는 사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갤러리 내일 ‘의식의 증첩’전

우창훈 작가, 7-27일

갤러리 내일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우창훈 작가의 ‘의식의 증첩’전을 연다. 전시 기간 동안 항상 관람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전시를 연다.

우창훈 작가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의식의 증첩’전을 연다. 전시 기간 동안 항상 관람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전시를 연다.



아파트경비노동자보호법 발의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권준호 의원(가운데)이 5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해설(Q&A) (2020.8.6.)

- [⑥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관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의무주체 확대 (18면)

● 사업명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 실적

카드뉴스 8회

● 내용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5.29.)
 - 1탄 산업안전보건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6.12.)
 - 2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6.26.)
 - 3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와 의무주체는?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7.30.)
 - 4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과 도급사업에서의 적용은?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8.19.)
 - 5탄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은?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8.31.)
 - 6탄 산업안전보건법중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규정내용은?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09.28.)
 - 7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벌칙은?
- 카드뉴스(알아두면 좋은상식!산업안전보건법A~Z)(2020.10.30.)
 - 8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조치화 안전교육, 근로감독의 역할은?

서울내일
게시자: 박재원 [?] · 5월 29일 · ③

알아두면 좋은 상식! [산업안전보건법 A~Z]
1탄 : 산업안전보건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김용균법 #시사상식 #서울내일 #SEOUL

카드뉴스 (2020.5.29.)

- 알아두면 좋은상식! 산업안전보건법A~Z
- 1탄 산업안전보건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서울내일
게시자: 박재원 [?] · 6월 12일 · ③

알아두면 좋은 상식! [산업안전보건법 A~Z]
2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김용균법 #시사상식 #서울내일 #SEOUL

카드뉴스 (2020.6.12.)

- 알아두면 좋은상식! 산업안전보건법A~Z
- 2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서울내일
게시자: 박재원 [?] · 8월 19일 · ③

알아두면 좋은 상식! [산업안전보건법 A~Z]
5탄 :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김용균법 #시사상식 #서울내일 #SEOUL

카드뉴스 (2020.8.19.)

- 알아두면 좋은상식! 산업안전보건법A~Z
- 5탄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은?

서울내일
게시자: 박재원 [?] · 8월 31일 · ③

알아두면 좋은 상식! [산업안전보건법 A~Z]
6탄 :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김용균법 #시사상식 #서울내일 #SEOUL

카드뉴스 (2020.8.31.)

- 알아두면 좋은상식! 산업안전보건법A~Z
- 6탄 산업안전보건법중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규정내용은?

● 사업명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 실적

동영상 1회

● 내용

- STOP! 더 이상 끼임사고는 NO! (2020.9.29.)

**서울내일**

게시자: 박재원 [?] · 9월 29일 · 🌐

산업현장에서 8명 중 1명은 끼임사고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끼임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 안.전.수.칙 !!**
함께 확인해 볼까요~?

제작 : 내일신문(서울내일)... [더 보기](#)



동영상 (2020.9.29.)
- STOP! 더 이상 끼임사고는 NO!

- 사업명

‘4대 악성사고 근절을 위한 언론 캠페인’ 시리즈

- 실적

기획기사 3회

- 내용

- 기획기사(2020.06.25.)
 - 영세 사업장 시설 개선-패트룰 강화 ... 작년 산재 사망 12% 뚫 (B8면)
- 기획기사(2020.08.18.)
 - ‘사망률 50%’치명적 질식사고, 대부분 안전수칙 안지킨 人災 (B6면)
- 기획기사(2020.09.24.)
 - 산재 위험땀 작업 중지권... 대피한 근로자에 불이익 줘선 안돼 (B8면)

東亞日報

B8

기획

2020년 06월 25일 목요일 B08

제30743호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동아일보

영세 사업장 시설 개선-패트롤 강화... 작년 산재 사망 12% 뚫

(불시 안전점검)

안전보건공단, 현장 안전 지킴이로

경기 부천시에 있는 정밀기기 제조업체 씨엠에스코리아의 변수정 대표는 지난해 작업장 안전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 환기장치를 설치해 작업장 내 위해 물질을 줄이고, 추락 방지를 위해 계단에 난간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의 '클린사업' 지원을 받았다. 이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설 개선 외에도 안전 컨설팅을 통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바닥에 널려 있는 드라이버 등 작업도구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나는 걸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휴대용 수납함을 보급했다. 생산한 장비를 쌓아두는 적치대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설치했다. 변 대표는 "작업장 크기에 따라 환기장치 배기 성능을 달라고 높이도 조절해야 한다는 걸 알게 돼 컨설팅이 아주 유용했다"고 말했다.

●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 1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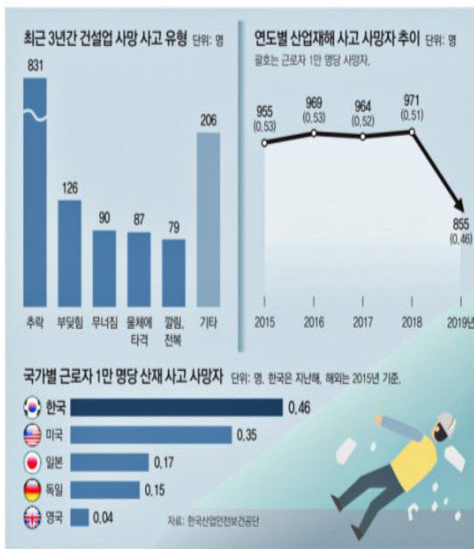
2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55명. 이는 전년 대비 11.9%(116명) 감소한 것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46으로 처음으로 0.5 이하를 기록했다.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은 일선 현장의 안전조치가 강화된 영향이 컸다. 공단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불시 안전점검(패트롤) 횟수를 늘렸다.

가장 집중적으로 패트롤을 한 현장은 추락 사망 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이다. 최근 3년 동안 추락 사고로 숨진 건설현장 근로자는 831명. 특히 50억 원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 600명(72.2%)이 숨졌다. 부적절한 작업 방법을 사용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2만7757곳의 건설현장을 점검해 고위험 현장 1082곳을 적발했다.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2017년 506명(추락 사고 사망자 276명)에서 지난해 428명(* 265명)으로 감소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돼 왔다. 경기도의 한 재개발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 A 씨는 "사공 규모가 작은 다가구 주택 공사 등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안전시설 강화는 지역 주민 안전과도 직결된다. 공사장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의



작년 각종 산업현장 사망 855명

전년보다 116명 ↓ ... 사상 최대 감소

추락 사망 사고 많은 건설현장 등

작년 하반기만 2만7757곳 점검

소규모 현장 추락 방지시설 지원도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안전조치 미흡 사고 끊이지 않아

올해 제조업까지 패트롤 확대

택지개발 지구에서 근무하는 권혁일 현장소장은 "공사 현장 주위에 분진망 역할을 하는 망을 설치해서 먼지도 줄이고 낙하물 사고 가능성도 낮았다"고 말했다.

공단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공사 금액별로 비용의 50~65%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현장 여러 곳을 운영 중이라더라도 연간 3곳까지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전시설을 강화한 현장과 아닌 곳은 사고 발생 비율을 차이가 컸다. 2013~2018년 이 같은 지원을 받은 곳의 재해율은 2.74%인 반면, 미지원 현장의 재해율은 3.05%였다.

● 건설업과 제조업에 패트롤 확대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올 4월 38명의 목숨을

잇아간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처럼 안전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명(5.0%) 늘었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8명(198명·78.3%)을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이었다.

공단은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7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3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지난해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을 제조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도 점검 대상을 120억 원 미만 현장까지 넓히기로 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각각 약 3만 곳의 현장이 점검 대상이다.

제조업 패트롤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사망자가 좀처럼 줄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2017년 206명, 2018년 217명, 2019년 206명이 제조업 현장에서 숨졌다. 3년 동안 숨진 사망자 632명 중 70% 이상 근로자가 2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다가 숨졌다. 기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기계를 작동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 현장 점검은 '30-30-3 전략'을 원칙으로 한다. 약 37만 개 사업장 중 위험 사업장 30%(약 11만 개)를 선정하고, 이 중 30%(약 3만5000개)에 패트롤을 한다는 것. 적발된 불량 사업장 3%(약 1000개)는 고용노동부의 현장감독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공동기획: 안전문화 확산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안전조치 불시 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불시 안전점검(패트롤)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민간 공사까지 '공기 산정 의무화' 확대 작업 서두르다 일어나는 사고 막기로

정부, 현장 안전기준 대폭 강화

건설 마감제 화재 안전 기준도

모든 공장-창고에 적용하기로

정부는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작업 중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현장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18일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민간 공사도 공사기간(공기)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공공 부문 공사에만 적용되는 적정 공기 산정 의무를 민간 공사까지 확대한다. 공기를 줄이려고 작업을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요구하다 산재를 일으킨 발주자는 형사 처벌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공사의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일부는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고가 잦은 사공사는 보험료가 올라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안전조치를 잘 하지 않아 재해율이 높은 사공사를 선정하거금 유도하는 것이다. 건설 자재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현 재 600m 이상 창고, 1000m 이상 공장에만 적용

되는 마감제 화재 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 창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벽과 내부의 마감제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해야 한다. 화재 안전 기준이 없었던 내부 단열재도 난연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한다.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면서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했다. 용접 등 과정에서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에게 공사 중지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 시에는 가스 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기존 공사대금 1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된다. 다음 달 100억 원 미만 현장 적용을 시작으로 내년 7월 80억 원 미만, 2022년 7월 60억 원 미만, 2023년 7월 5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 규모(50억~120억 원) 현장은 위험작업 신고제가 신설된다. 용접 등 배관 작업, 유증기가 발생하는 미장·방수 등 작업, 불티가 생기는 절단 작업 등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이 신고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불시 안전점검(패트롤) 대상도 화재 고위험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패트롤가는 지난해 27대에서 연내 108곳까지 늘려 점검 횟수와 대응을 늘려갈 방침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東亞日報

B6

기획

2020년 08월 18일 화요일 B06면

⑤ 제30789호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동아일보

‘사망률 53%’ 치명적 질식사고, 대부분 안전수칙 안지킨 人災

산업안전보건공단, 집중점검 나서

늦더위가 이어지던 지난해 9월 10일, 경북 영덕군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태국과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4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에 있는 수산물 보관 탱크를 8년 만에 청소하기 위해 근로자 1명이 내려갔다가 의식을 잃었다. 이를 구조하려 들어간 3명도 모두 2~3분 만에 쓰러졌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모두 유독가스 흡입으로 질식사한 것이다.

긴 장마가 끝나고 30도가 넘는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산업 현장에서는 ‘질식사고 비상’이 걸렸다. 오페스처리장, 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 일하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오고 있다.

● 사고 나면 절반 이상 숨져

질식사고는 사망률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재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312명이 질식사고를 당했다. 이 중 사망자만 166명에 이

● 올 상반기에도 6명 인명 피해

질식사고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질식사고는 통상 무더위와 함께 발생 건수가 늘지만 올해는 이미 상반기(1~6월)에 5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장기간의 장마가 끝나고 당분간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다.

질식사고는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쉽지 않다. 오히려 심혈관 구조에 나섰다가 인명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6월 27일 대구 달서구의 폐지 재활용 업체에서는 소화수소 증독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지난해 9월 있었던 영덕군 오징어 가공업체 사례처럼 밀폐 공간을 청소하던 작업자 한 명이 질식돼 쓰러지자 동료 3명이 구조에 나섰다. 함께 사고를 당한 경우다. 최근 10년간 질식사고로 목숨을 잃은 166명 중에는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한 경우가 22명에 이른다. 공단 관계자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의식을 잃어 기어오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질식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산소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



공기호흡기를 한 근로자가 맨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노출 등의 사고 우려가 있어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10년간 312명 사고... 166명 숨져

부패물질속 황화가스 흡입 ‘최대’

산소 결핍·일산화탄소 사고 順

“밀폐공간 작업엔 안전장비 갖추고

작업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중간 환기만 잘해도 사고예방”

른다. 사망률 53.2%로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1.2%)의 40배가 넘는다.

질식사고의 원인은 크게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흡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소 결핍은 공기 중 산소 농도(통상 21%)보다 낮은 18% 미만의 산소 농도에 노출되는 경우다. 산소 농도가 12%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지러움, 구토, 근력 저하 등으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다. 10% 아래로 내려가면 기도도 폐쇄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된다. 8% 미만이면 실신에 이르고 6% 미만이면 호흡정지와 함께 5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

유해가스 흡입은 오수, 폐수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녹아 있던 황화가스나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는 것이 대표적이다. 맨홀 등에 있는 부패한 슬러지(허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긁어내면 황화가스가 공기 중에 섞인다. 이 가스를 흡입하면 산소를 뇌로 보내지 못하게 돼 산소 결핍과 같이 의식을 잃게 된다. 최근 10년 동안 질식사고 사망자 166명의 사망 원인을 보면 황화가스 흡입(48명·28.9%)이 가장 많다. 이어 산소 결핍(38명·22.9%), 일산화탄소 흡입(34명·20.5%)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식 재해는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호흡이 정지된 뒤 구조되더라도 언어장애, 운동장애, 환각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질식 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단, 사고 예방 위해 8월 말까지 감독

질식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밀폐 공간에서 일할 경우에는 작업하기 전과 작업 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해 봐야 한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환기하는 것도 필수다. 또 위험 밀폐 공간에는 반드시 감지인을 배치해야 한다. 질식사고의 대부분은 이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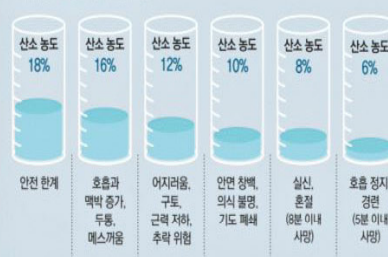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달 28일까지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질식 예방 장비 보유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밀폐 공간이 많은 폐수 배출시설 등은 실태조사를 거쳐 위험 수준을 등급화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지도에 나선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 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에 산소와 유독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만 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 사망 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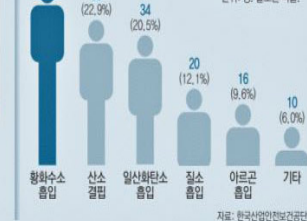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공동기획: 안전보건공단

산소 결핍에 따른 인체 반응



최근 10년간(2010~2019년)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 원인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식사고 예방장비 구입비 최대 1400만원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무상대여 가능”

작업 현장에서 질식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공기호흡기 등을 미리 갖추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빠른 구조도 장비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갖춰야 할 장비 10여 개를 권장하고 있다. 우선 산소 농도와 혼합가스 농도 측정기가 필요하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일할 때 쓰인다. 밀폐 공간 안으로 바깥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공기치환용 환기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기호흡기는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작

업할 때뿐 아니라 부상을 구조할 때도 필요한 장비다. 산소를 공급해 주는 송기마스크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밀폐 공간에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휴대용 랜턴 등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장비들을 영세한 업체가 모두 갖추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공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구매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한 사업장당 2000만 원 이내에서 구입비용의 70%(1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질식사고 예방용 장비를 무상으로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장비 구입비용 지원이나 무상 대여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유선전화(1644-858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여름철 질식사고 고위험 사업장 관리

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작년 실태조사에서 밀폐된 작업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과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단 직원들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 질식사고에 대한 대화가 잘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회사 차원에서 대응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등 질식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작업 전후에 점검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기획기사(2020.8.18.) - ‘사망률 50%’ 치명적 질식사고, 대부분 안전수칙 안지킨 人災 (B6면)

산재 위험땀 작업 중지권... 대피한 근로자에 불이익 줘선 안돼

안전보건공단 "산안법 안착 서둘러야"

지난해 1월,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의 고층 전기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 씨가 "작업 중지"를 외쳤다. 당고 있던 발판
에 문제가 있어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인천석유화학 관리자는 즉각 작
업을 중지시켰다. 이후 발판을 보강한 뒤야
공사가 재개됐다.

A 씨처럼 현장 근로자가 안전상 문제가 있
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이다. SK인천석유화학 같은 개별 대기업
은 이미 입찰 안착서와 공사 계약서에 근로자 작
업중지 권한을 명시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이 같은 권한을 얻은 것은
올해 1월부터다. 노동계에선 근로자의 권리 보호
를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은 근로자가 이 권한을 알
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강화된 '근로자 작업중지권'
근로 현장의 안전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법은 올해 1월 30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여러

가지 않았다. 만약 근로자 차원에서 위험한 상
황에 '스톱'을 외칠 수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
지 않았을 수 있다는 성찰의 계기가 된 것이다.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
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
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했
다. 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도 담았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다.

●급박한 위험' 두고 갈리는 노사

하지만 분쟁의 소지는 지금도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어
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대표적이다. 어떤 경우에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는 혼란스러
울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해당 법 개정 당시
급박한 위험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
를 들어 높이 2m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데 작업 발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추락할 우려가 높을 경우 근로자는 즉각 작업중
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
는데 바로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
다. 이 경우에도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데 산소 농도 측정 없
이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한다면 작업중
지 권한이 생긴다.

노사는 이 같은 권한을 줄까 요구했다. 이
번 법 개정은 이 같은 노동계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것이다. 다만 사측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명확하
다는 불만이 크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아직까
지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노사 이견이 큰 상황
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른바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 없이 현장에 적용하면 판단다
면 결국에는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간 1000명 가까이 산재 사망

정부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건 국내 작업현장 안전이
어정히 부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0년
부터 10년간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1만173명에 달한다. 해마다 1000명, 매일 3명 이
상이 일터에서 작업 중 숨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2015년 근로자 1000명
을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조사를 한 결과
75%의 근로자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권
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작업중지가 근
로 문화로 정착되면 근로자 스스로 언제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개정된 산
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안착돼 근로자가 위
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
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작업중지권 강화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park@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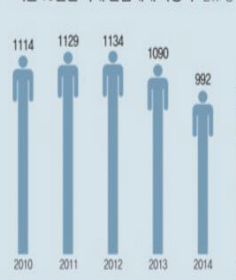
올해 1월부터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 처했을 때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이 법률로 명문화됐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사진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안전보건공단 제공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현장

높이 2m 이상의 안전설비가 없는 건설 현장
비계 등 시설물 설치가 적합하지 않아 붕괴사고 우려가 높은 곳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 화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화재 위험이 높은 곳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사사고 우려가 높은 곳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10년간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 단위: 명



자료: 안전보건공단

佛,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위험 공통 인지때 법의 보호

美, 작업중지권으로 근로 손실 줄여
다선 법원 판결로 근로자 권리 보장

해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도입해 왔다. 위험한 작업을 회피하는
것이 노동권의 하나인 데다 생산성 향상에도 도
움을 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국노동관계법, 노사관계법, 산업안
전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
한을 명시했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세하게 작업
중지 권리를 명시하면서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
에서 작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편이다.

미국에서는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 안전권리

강화에 나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알파마늘 제조
기업인 알코아가 대표적이다. 1987년 기업 경영
력이 떨어지면 알코아는 산업 최고경영자(CEO)
로 폴 오닐을 선임한다. 오닐 CEO는 취임 일성
으로 '안전 경영'을 내세웠다. 그는 "현장에서 사
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 부딪하면 일단 공장을 멈
추라"고 지시했다. 이 회사는 연간 400억이 넘는
현장 작업중지가 이뤄졌지만 근로손실액은
1987년 근로자 100명당 1.86일에서 0.2일로 오
하러 줄었다.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1982년 12월 작업중지권을 도입했
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심각하고 즉각적
인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상황에서 철수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슷

하다. 다만 함께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 상
황이 위험하다고 공통적으로 인지할 때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독일 역시 민법 618조에 근로자 작업중지권
을 규정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안전조치
요구할 권리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
질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일본은 근로자 작
업중지권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법원 판
결 등을 통해 위험 현장에서 작업을 거부한 근로자
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park@donga.com

공동기획: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 사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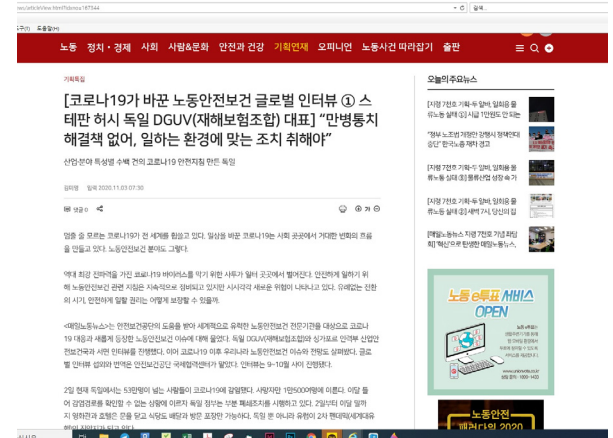
노동안전보건 패러다임 2020 “바뀌야 줄인다”

● 실적

특집기획기사 9회, 전문가 칼럼 10회, 온라인캠페인, 오프라인캠페인, 좌담회(1회), 집담회(1회), 노동안전패러다임 2020 책자 발간·배포

● 내용

- 노동안전 패러다임 2020 특집기획기사 : 9회
 -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글로벌 인터뷰① 스테판 허시 독일 DGUV(재해보험조합) 대표 - “만병통치 해결책 없어, 일하는 환경에 맞는 조치 취해야”
<2020년 11월 3일(화) 지면(8~9면) 및 온라인 보도>
 -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글로벌 인터뷰② 사일러스 승 싱가포르 인력부 산업안전 보건국장 - “코로나19 대다수 이주노동자 기숙사 발생, 격리·검사·치료·복지 다면적 접근”
<2020년 11월 6일(금) 지면(6~7면) 및 온라인 보도>
 -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글로벌 인터뷰③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플랫폼 회사 배달 알고리즘 정부 승인받게 해야”
<2020년 11월 16일(월) 지면(12~14면) 및 온라인 보도>
- <이하 생략>
- 안전보건 전문가칼럼 : 14회
 -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 <2020년 4월 23일(목) 지면(16면) 및 온라인 보도>
 - 밀폐작업 사망사고 ‘특단대책’ 마련해야 <2020년 7월 2일(목) 지면(16면) 및 온라인 보도>
 - 현장 안전보건활동 위축시킨 타임오프제 <2020년 7월 30일(목) 지면(17면) 및 온라인 보도>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2020년 9월 10일(목) 지면(17면) 및 온라인 보도>
- <이하 생략>
- 온·오프라인 캠페인 광고
 - 온라인 캠페인 광고 : 홈페이지 노출 249일 <2020년 4월 27일~12월 31일>
 - 오프라인 캠페인 광고 : 백면 광고 <2020년 9월 14일~18일(5일), 9월 21일~25일(5일)>
- 노동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좌담회, 집담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15주년> 기획좌담회 (1회) <2020년 4월 27일(월) 11시 : 청년재단 회의실>
 - <왜 노동자 죽음은 되풀이되는가> 기획집담회 (1회) <2020년 5월 18일(목) 14시 : 청년문화공간 JU>
- 노동안전보건패러다임 2020 단행본 발간·배포
 - 노동안전보건 패러다임 2020 단행본 2,200부 제작 노동조합 사무실, 노동유관기관 단체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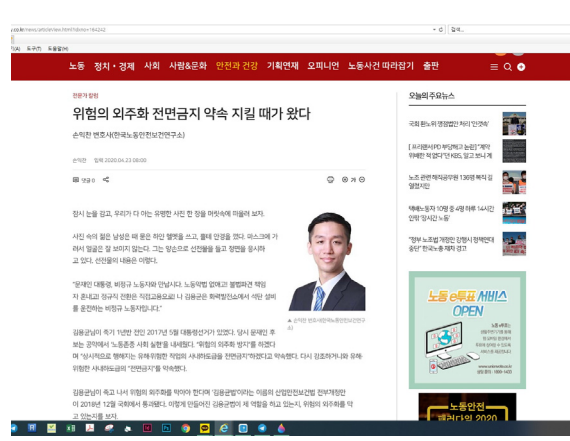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글로벌 인터뷰① 스테판 허시 독일 DGUV(재해보험조합) 대표 - “만병통치 해결책 없어, 일하는 환경에 맞는 조치 취해야” <2020년 11월 3일(화) 지면(8~9면) 및 온라인 보도>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글로벌 인터뷰② 사이러스 승 싱가포르 인력부 산업안전보건국장 - “코로나19 대다수 이주노동자 기숙사 발생, 격리·검사·치료·복지 다면적 접근” <2020년 11월 6일(금) 지면(6~7면) 및 온라인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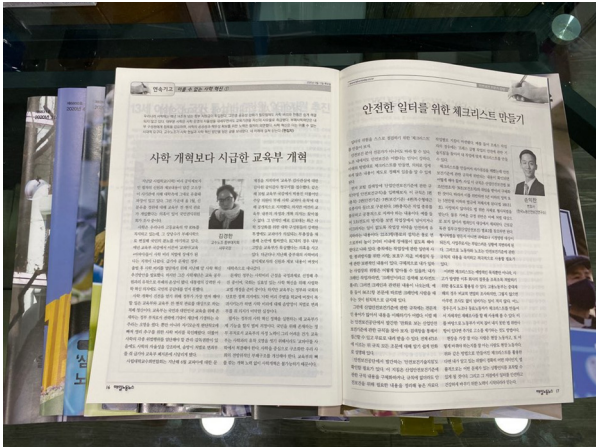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코로나19가 바꾼 노동안전보건> 글로벌 인터뷰③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플랫폼 회사 배달 알고리즘 정부 승인받게 해야” <2020년 11월 16일(월)
지면(12~14면) 및 온라인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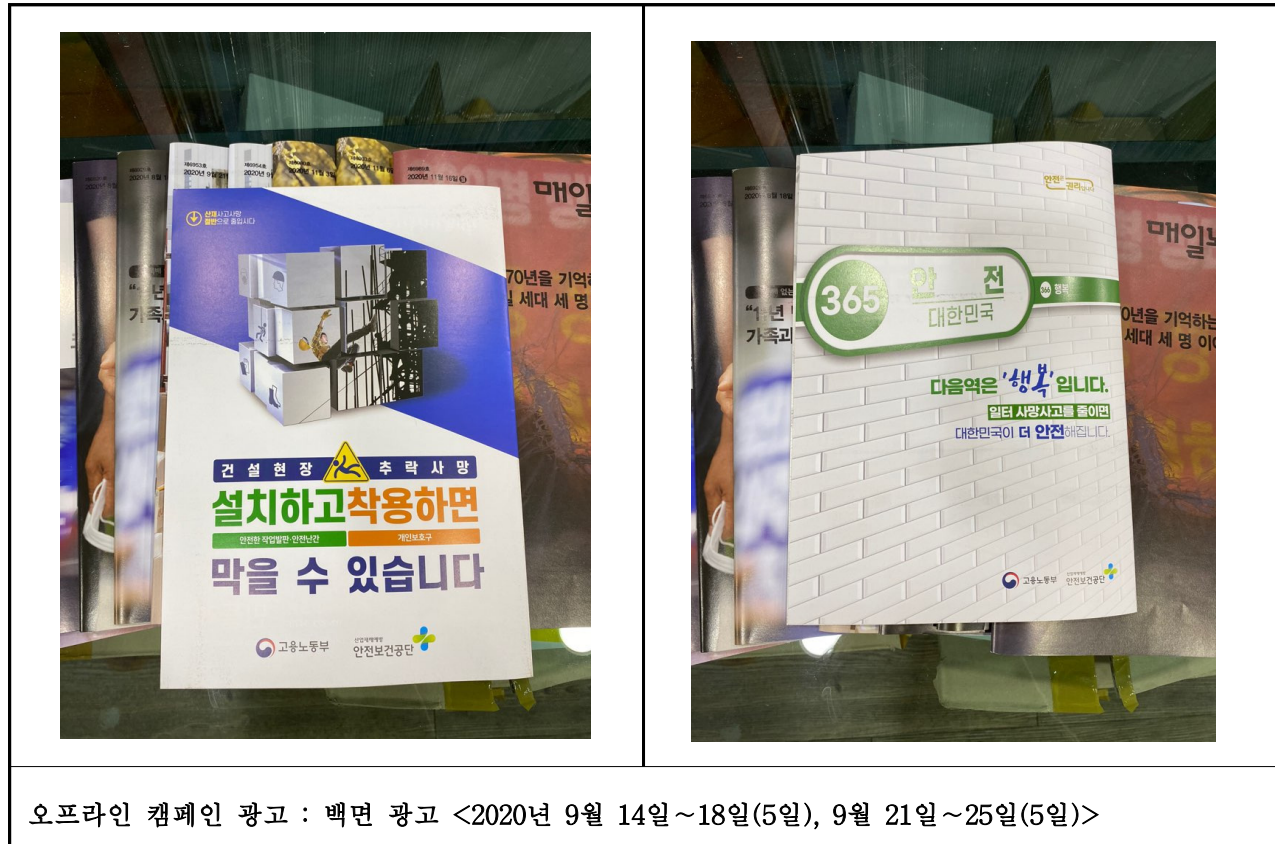
· 위험의 외주화 전면금지 약속 지킬 때가 왔다 <2020년 4월 23일(목) 지면(16면) 및 온라인 보도>



현장 안전보건활동 위축시킨 타임오프제 <2020년 7월 30일(목) 지면(17면) 및 온라인 보도>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2020년 9월 10일(목) 지면(17면) 및 온라인 보도>





<왜 노동자 죽음은 되풀이되는가> 기획집담회 (1회) <2020년 5월18일(목) 14시 : 청년문화공간 JU>



노동안전보건패러다임 2020 단행본 발간·배포

● 사업명

‘안전한 일터는 당신이 만듭니다

● 실적

기획기사 3회, 기고문 1회, 특별보도 1회, 지면광고 4회, 메일링서비스 1회

● 내용

- 기획기사(2020.04.28.)
 - ‘위험에 내몰린 직업계 학생들’(18면)
- 기획기사(2020.05.19.)
 - ‘사망사고 잇따르는 부산항’(18면)
- 기획기사(2020.06.16.)
 - ‘잇따르는 승강기 안전사고’(18면)
- 기고문(2020.06.05.)
 - ‘코로나와 산업안전’(21면)
- 특별보도(2020.07.01.)
 - 독자의 눈 “산업안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22면)
- 지면광고(2020.07.10./07.17./08.06./08.07.)
 - 5단 광고 게재(지면 1/3 사이즈) 4회
- 메일링서비스(2020.07.01.)
 - 웹구독자(약 13만명) 메일링 서비스

150

18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제 2322 호

기획

부산일보

전국 4대 항 중 사망자 수 1위... '안전 투자' 눈감은 탓

안전한 일터, 당신이 만듭니다

◎ 사망사고 잇따르는 부산항

최근 2년간 항만 노동자 8명 사망
낮은 속도·중장비 운행 속 맨몸 작업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환경이 원인
기준 '안전관리 상설협의체' 유명무실
문제점 즉시 개선토록 예산 투입해야

물동량 2000만 TEU 이상의 '메카포트', 세계
적인 환적 거점항. 부산항이 이 같은 타이틀을 얻
기까지, 365일 24시간 부산항을 쉬지 않고 돌리
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 뱃나는 타이틀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부산항은 최근 전
국 4대항 중 '사망자 수 1위'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2018년부터 2년간 8차례의 사망사고가 잇따
라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부산항의 사망 사
고가 단순 '사고'가 아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는 투자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다고 지적한다.

■ 잇따르는 사고-예견된 '인재'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 50분경, 부산 남구
감만부두 4번 선석 앞에서 이동 중이던 크레인 기
사 A(48) 씨가 야드 트랙터에 치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근무를 마친 뒤, 야드 근무자와 교대하기
위해 3번 선석으로 걸어 이동하는 중이었다. 보통
부두를 이동할 때는 사물바스를 타고 이동하지
만, 이날은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웠던 탓에 혼자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트랙터 운전자 B(3
2) 씨는 "당시 비가 오는 데다 날씨가 어두워 시



부산항 근로자들이 수십의 컨테이너와 중장비가 실린 움직이는 상륙에서 위험작업 작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2018년 1월 부산 남구 감만부두 야드장에서 근로자가 컨테이너에 걸려 숨졌던 사고 현장 모습.

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후, 화상은 A 씨와 B 씨로 한정
다. 왜 사물바스를 타지 않았으며, 왜 주변을 제
대로 살피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하지
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망'에 있었다. 산업안
전보건법 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직
업면적 조도는 75룩스(lux) 이상이어야 하나, 사고
당시 조도는 7룩스에 불과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조망이 어둡다는 이야
기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부두에서의 위험천만한 상황은 이번만 아니다.
2018년에는 두 명의 작업자가 라싱콘(컨테이너끼
리 움직이기 위해 굴러다니는 도구)을 손수레로
운기던 중 함몰을 당했다. 대부분 전자동 시스템을
갖춘 상반은 자게자를 이용해 라싱콘을 옮기고 있
지만, 북항에서는 여전히 이 장비들을 노동자들이
직접 옮기고 있다. 중장비들이 쉴 틈 없이 머리 위

를 오가고, 수십 톤의 중장비가 수도 없이 돌아다
니는 데다 조망마저 어둡지만 노동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맨 몸으로 부두에서 작업을 벌인다.
부산항에서는 2018년 이후부터 총 8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에만 5건, 2019년에 3
건이다. 중상 등 사고는 더 빈번히 발생한다.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해 1월~9월까지 부산항에서는 총 9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중상은 2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는 '넘어짐'에 의한 부상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
며, '물체에 맞음'이 26건, '끼임'이 12건, '떨어
짐'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항은 노조와 다른 가장 오래된 항만 북항
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잇따른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컨테이너가 떨어지거나, 신
규 장비들 들어가지 않은 탓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두 운영자들이 적
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

책이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 연
제까지 부두를 운영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설비에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문제는 노동자가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
로 노동 환경이 열악할 경우 '작업 중지' 등을 요구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두의 경우 단일 사업장이
아닌 데다 협의해야 할 주체가 많아 이마저도 어
려운 상황.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한 부산항을 만
들기 위해서는 부산해수청, 부산항만공사, 각 부
두 운영사, 노조 등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고 입을 모은다.

■ '묵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2018년 11월 20일 부산 동구 자성대부두에서
도 한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2018년에 일어난 5
번째 사망 사고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부산항 안
전사고 방지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부산항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상
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산항은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사망 사고의 경우도 조망 밝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인 75룩스(lux)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
는 수준이었다. 기온만 만들 것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따르는 제재 조치도 뒤따라야 자
청이 실효성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항만 내 안전 사고 뿐 아니라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 강령준법(항만준법사업
법 개정 법률안)'도 하루 빨리 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조항과 같은 강제 조항은 이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어 '이

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했
다. 2018년 5월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2019년에
서야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가 구성됐다.
상설협의체에는 부산해수청, 부산해수청, 부산
항만공사, 운영사, 노조 등이 참석하며, 분기별로
안전을 모았다. 2019년 5월에는 북항, 신항, 감
천항 각 1개 부두에 유관기관 합동 현장실태조사
도 진행됐다.
하지만 상설협의체가 구성된 2019년에도 사망
사고는 잇따랐다. 현장에서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이후 각 기관이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묵상공론'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설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에도, 2019년 12월에는 2건의 사고가 보통 간격
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 북항 감만부두에서 어두
운 조망 탓에 사고가 난 것이 드러났지만, 아직까
지도 조망이 교체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조망을
LED로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왔지만, 교체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를 두고 기관 간에 '논치 싸
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협의체에 참가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
산항만공사 측은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비유를
들여가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
산항만공사가 비용을 들이고, 항후 운영사에 구상
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었지만 서로 책
임을 미루는 사이 6개월이 지났다. 아직도 감만부
두의 조망은 개선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공부를
무릅쓰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부산항은 노조 후속책인 부두측 부장은 '안전
상설협의체가 만들어지지만 위한 요소에 대해서
발급하고, 사고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즉시 개선이 안 된다면 '묵상공
론'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협의체에서 책임소재
를 명확히 해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리 기자 yooril@busan.com

전국 첫 '항만 근로자 안전 관리지침' 추진

부산해수청, '지침' 연구용역 완료 보고
오는 6월 안전관리 주제 지정 등 발표

부산항에서 2년간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서 국내 최초로 항만 근로자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14일 '부산항 근로자 안전
관리지침' 제정 관련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었
다. 해수청은 이 자리에서 나온 부산항만공사(B
PA)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노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중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
다.

그동안 국내에는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지침이 전무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은 전 직종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항만하역 작업
에 특화된 구체성과 전문성이 부족했다. 또 부산
항만공사에서 만든 '항만 안전매뉴얼'이 있으나,
2013년 제정된 데다 작업별 근로자에 대한 상세
한 지침까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지침 제정 용역을 수행한 한국항만인수원 부산
연수원은 일본 등 국외의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지

침과 국·외의 항만 안전관련법 등을 참고해 지침의
초안을 만들었다. 그동안 복잡한 계약들로 얽혀
명확하지 않았던 안전 관리 주체를 지정하고, 작
업별로 세부 지침을 규정했다. 지침에는 하역작업
공통 안전수칙부터 컨테이너하역 하역, 일련화물
하역 하역 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까지 담겼다.
하지만, 지침을 제정하더라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지
적도 나온다. 부산항은 노조는 사업주가 지침을 지
키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치 등이 따라야 지침이 실효

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산항은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사망 사고의 경우도 조망 밝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인 75룩스(lux)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
는 수준이었다. 기온만 만들 것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따르는 제재 조치도 뒤따라야 자
청이 실효성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항만 내 안전 사고 뿐 아니라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 강령준법(항만준법사업
법 개정 법률안)'도 하루 빨리 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처벌 조항과 같은 강제 조항은 이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어 '이

중 처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항후 이 지침을 법제화 하기 전 정부 부처간 협의
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항만인수
원 부산연수원 오준수 교수는 "부산항 근로자 안
전관리 지침을 전항만에 적용하기위해 이를 해
수부 관할의 '항만준법사업법'의 하위법령으로 제
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첩
할 우려가 있다.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용
노동부의 해양수산부 간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리 기자

※ 이 기획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일보가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현대HCN 부산방송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을 종료합니다.



현대HCN 부산방송은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을
2019년 08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종료 이후에는 아날로그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세대는 시청이 어렵게 되므로 현재 별도의 조치 없이
아날로그 TV를 통해 방송 시청 중 세대는 1977-8900 또는 고객센터 1248-0000(민원선)로 즉시적으로
방송 시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에 디지털 방송 신호를 아날로그 방송 신호로 변환하는 단말 장치 등
현대HCN 부산방송의 조치 없이 이미 보신 세대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관계없이 지속적 시청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111 현대HCN 부산방송 센터 1877-8900

부산일보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고
구독료
할인받으세요!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시면
월 구독료를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 자동이체(계좌·카드이체) 신청방법 ●



전화신청

1544-7044로 전화하여 상담원
안내에 따라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카드번호), 생년월일을 알려주십시오.



직접신청

거레 중인 은행을 방문하여 창구직원에게
"부산일보 구독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 구독료지로 창구지 지참)

www.busan.com



기획기사(2020.5.19.) - 사망사고 잇따르는 부산항(18면)

152

Opinion

밀물썰물

인형들이 안녕!

더 이상 인형들은 볼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기를 이어 오던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다스나와 위안이 된 것은 관중석을 차지했던 인형들이었다. 프로축구 경기 때 리얼돌(상인용품인형) 설치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팬들이 보거나 구경에서 미련한 곳까지 인형들을 보면서 선수들은 물론 TV 중계를 보는 팬들도 즐거워했다. 국내 프로 스포츠가 외국까지 전파를 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관중석이 놓인 인형들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인형들을 볼 수 없게 됐다. 방역당국이 최근 프로 스포츠의 재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5월 5일, 프로축구는 5월 8일 개막해 현재까지 야구관중 경기로 진행됐다. 여자프로야구는 5월 14일부터 대회를 시작했지만 결리 없이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

프로 스포츠에 제한적이나 관중 입장이 허용된 것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명 이하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가 스포츠의 무관중 경기까지 이어지면서 구단들이 재정적 위기에 놓인 것도 한몫했다. 위대파티와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형성된 분배가 제기된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아직 구체적인 입장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KBO 리그와 K리그는 초기 관중 비율에 대해 30% 수준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하더라도 예전의 응원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30일 발표한 'KBO 코로나19 대응 3차 통합 매뉴얼'을 보면 팬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입장부터 응원, 식음료 취식 과정까지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 관람 시 모든 관중은 입장할 때부터 야구장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체온 37.5도 이상이면 출입이 제한된다. 관중 정보 확인을 위해 모든 티켓은 온라인 예매나 카드 결제만 허용된다.

야구장 내에서 식음료 대장은 운영되지만, 관람석에서의 취식 행위와 음식물 버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주류를 제외한 물과 음료는 허용된다. 관람석에서 매주 한 번씩은 물과 음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응원 활동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비탈 분출을 우려되는 구단들이 응원, 점수를 유도하는 응원 등은 제한된다. 사자야구장에서 대항을 하는 '사자노래'는 당분간 옛일이 될 듯하다. 김민정 스포츠전문기자 paper@kbs.com

작명성의 플러그인



는설위원

취준생 분노 폭발시킨 '인국공 사태' 우리 사회에 또 다시 공경 화두 던져

청와대·정부, 자기 잘못도 일방 집행 수감할 만한 기준·절차의 공경 없어

시간 걸려도 공경의 원칙 도출해야 국민과 더불어 가야만 정책도 성공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3대 금기'가 회자된다. 대입과 병역, 그리고 취업 영역에서의 부정 또는 불공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자·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이 세 영역은 항상 국민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의 많은 난제도 이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행한 한 국민은 자신만의 시선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토론이 가능할 정도다.

이런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지금 막 그렸다. 일자리 자체가 생겼는데도, 정규직 전환은 노동시장 진입을 바라보는 청년층에게 더욱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내 일리자는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은 더욱 심각해졌다. IMF 구제금융을 이후 삼십여 년과 기업들의 비정규직을 줄였다. 게다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겹쳐지면서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민간 영역에서의 기회 축소나 자연스레 취업준비생의 눈을 공공 부문으로 돌리게 했다. 공공 부문이 직업을 안정성과 함께 기업가의 경쟁성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대부분 기업에 대해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이 몰려오는 공공 분야에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공공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민정 스포츠전문기자 paper@kbs.com

'여민(與民) 정부'의 길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3대 금기'가 회자된다. 대입과 병역, 그리고 취업 영역에서의 부정 또는 불공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자·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이 세 영역은 항상 국민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의 많은 난제도 이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행한 한 국민은 자신만의 시선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토론이 가능할 정도다.

이런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지금 막 그렸다. 일자리 자체가 생겼는데도, 정규직 전환은 노동시장 진입을 바라보는 청년층에게 더욱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내 일리자는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은 더욱 심각해졌다. IMF 구제금융을 이후 삼십여 년과 기업들의 비정규직을 줄였다. 게다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겹쳐지면서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민간 영역에서의 기회 축소나 자연스레 취업준비생의 눈을 공공 부문으로 돌리게 했다. 공공 부문이 직업을 안정성과 함께 기업가의 경쟁성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대부분 기업에 대해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이 몰려오는 공공 분야에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공공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민정 스포츠전문기자 paper@kbs.com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3대 금기'가 회자된다. 대입과 병역, 그리고 취업 영역에서의 부정 또는 불공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자·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이 세 영역은 항상 국민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의 많은 난제도 이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행한 한 국민은 자신만의 시선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토론이 가능할 정도다.

이런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지금 막 그렸다. 일자리 자체가 생겼는데도, 정규직 전환은 노동시장 진입을 바라보는 청년층에게 더욱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내 일리자는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은 더욱 심각해졌다. IMF 구제금융을 이후 삼십여 년과 기업들의 비정규직을 줄였다. 게다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겹쳐지면서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민간 영역에서의 기회 축소나 자연스레 취업준비생의 눈을 공공 부문으로 돌리게 했다. 공공 부문이 직업을 안정성과 함께 기업가의 경쟁성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대부분 기업에 대해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이 몰려오는 공공 분야에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공공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민정 스포츠전문기자 paper@kbs.com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3대 금기'가 회자된다. 대입과 병역, 그리고 취업 영역에서의 부정 또는 불공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자·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이 세 영역은 항상 국민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의 많은 난제도 이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행한 한 국민은 자신만의 시선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토론이 가능할 정도다.

이런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지금 막 그렸다. 일자리 자체가 생겼는데도, 정규직 전환은 노동시장 진입을 바라보는 청년층에게 더욱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내 일리자는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은 더욱 심각해졌다. IMF 구제금융을 이후 삼십여 년과 기업들의 비정규직을 줄였다. 게다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겹쳐지면서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민간 영역에서의 기회 축소나 자연스레 취업준비생의 눈을 공공 부문으로 돌리게 했다. 공공 부문이 직업을 안정성과 함께 기업가의 경쟁성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대부분 기업에 대해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이 몰려오는 공공 분야에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공공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민정 스포츠전문기자 paper@kbs.com

오늘을 여는 시

구름

김영

구름, 내가 꽃향기 맡으며 계단을 내려갈 때 뒷산을 넘어가면, 구름, 내가 달리는 기차 타고 가는 버선바지를 때 포도밭 위에 떠 있다면, 구름, 내가 소수 사자 작은 불꽃 기 구경할 때 저수지 잔물결 위에서 출렁이면, 구름, 내가 찻집을 들릴 때 강 건너 산자락에 걸려있던, 구름, 미끄럼틀 타던 아이가 엄마 손잡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아 트 피워칠 꼭대기에 걸려있던, 구름, 내가 구름 땀을 뿜던 커다란 뱀을 보며 웃음을 흘리며 발바닥을 밟았던, 구름

- 김철 시집 <그때 내 그림 속에서 그대의 그림을 그려요> 중에서 -

김민정 스포츠전문기자 paper@kbs.com

독자의 눈 산업안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상황이다. 방역 문제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거안사위(居安思危)'이다. 이는 중국 고전에도 나오는 말로 '편안할 때 항상 위가 있을 수 있는 위험과 재앙을 미리 생각하라'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방역 당국이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러한 거안사위를 잘 취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서 사흘 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855명(하루 평균 3명)이었고 전체 사고 재해자는 9만 4,047명이다. 우리 부서의 경우는 사고 사망자가 53명이고 휴업일수 90일이 넘는 중상해 재해자 수는 1,659명이다. 이러한 산업의 결과로 고귀한 인명 손실뿐 아니라, 작-간

김민정 스포츠전문기자 paper@kbs.com

김민정 스포츠전문기자 paper@kbs.com

김민정 스포츠전문기자 paper@kbs.com

김민정 스포츠전문기자 paper@kbs.com

2030 부산 도시계획 → 뜨는 지역, 지는 지역

SBS CNBC '부동산 삼국지' 고정 출연 박종철 교수 부동산 특강

약력 : 세종 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 EBS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법 교수
다수 공공기관 자문위원 / 한국 생산성 본부 지도 교수
SBS CNBC 부동산 삼국지

2019. 12. 03 부동산의 보물 지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도시 계획 2030도 수정되어 박종철 교수님의 특별한 강의로 준비 했습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관리)계획 2030]
부산광역시 **부동산의 미래 먹거리** 여가에 다 있다!
'2030 부산 도시 계획' → 뜨는 지역, 지는 지역 미래 개발지 철저 해부 분석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로부터 전수받는다

부동산! 정보는 힘이다
딱!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부산시 어디가 개발 될 것인가?
돈이 되는 부동산 특강!

- 일 시 : 7월 3일 금요일
- 시 간 : 오후 2시 ~ 5시 (선착순 25명) **저녁 7시 ~ 10시** (선착순 25명)
- 교육비 : 5만원 (교재포함) / 계 작 : 농협 301-0273-4950-71 (김승이 내집땅)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협성프라자 6층 내집땅 재테크 교육원
문 의 : 051) 507-4986 / 010-3849-4986

내집땅 재테크 교육원

코로나시대의 부동산 재테크 시장 방향 제시

국내최고 임정민 대표의 돈 되는 NPL(부실채권) 실전투자 교실

아직도 경매하려 가나? 왜? 경매보다 더 안전하니까
우리는 왜? 경매보다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내집땅 재테크 교육원에 NPL 하러 간다 왜? 경매보다 대출이 쉬우니까

[NPL 공개 무료 특강안내]

- 날짜 : 7월 11(토) 산악은-전환산형
- 시간 : 오후 2시-5시까지
- 장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10 협성프라자 6층(내집땅재테크교육원)
- 신청 : 051) 507-4986 / 010-3849-4986

[NPL 매입 장점]

- * 일반 입찰 참가시 100% 낙찰 가능
- * 압도 속세에 절감
- * 금융 기관 대출 용이
- * 경매 부동산의 이해 관계인 자료 수집 용이
- * 일반 부동산 영도에 대한 부담에서 탈출
- * 낙찰 부동산에 대한 단기 재 매각이 용이

관심 가지자 하실 분!

- * 내 집 마련을 하고 저렴하게 마련할 분
- * 내 공공금 가지고 싶은 분
- * 일반 부동산으로 현금 받고 싶은 분
- *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

*** 경매보다 안전하니까**
* 경매보다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 경매보다 대출이 더 쉽으니까
* 개인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 경매 NPL, 전환, 산악은은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부동산 투자기법 및 교육을 그대로 내집땅 재테크 교육원에 가져오다"

특별보도(2020.7.1.) - 독자의 눈 "산업안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22면)

[메일링 통계] 안전문화확산공모사업

날짜	발송량	성공	대기	사용자 없음	박스 풀 오류	서버 오류	네트워크 오류	설정 오류	기타오류
2020-07-01	138,412	110,005	0	19,841	22	3,255	3,059	1,183	1,047

1,000 / 1,000 (83.07%)

수신확인

연지찾기

피부미끄러움

환경설정

피부스럼

주수목

개인주소록

공통주소록

안전한 일터 당신이 만듭니다!

《부산일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한 일터, 당신이 만듭니다' 시리즈를 통해 지역 내 주요 산업별 사고와 재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기획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부산일보가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01 위험에 내몰린 직업고교 학생들
실습생은 근로자 아닌 학생 신분, 노동법 사각지대 '신물'

>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 18면 기획보도

02 사망사고 잇따르는 부산항
전국 4대 항 중 사망자 수 1위... 안전 투자 눈감은 탓

>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 18면 기획보도

03 잇따르는 승강기 노동자 안전사고
하청업체에 낮은 단가 강요하는 불법 하도급이 '화근'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 18면 기획보도

부산일보 본 기획은 부산일보에서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에게만 발송하는 기획입니다.
이메일 수신률 향상 및 오피스시간 종료 후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신거부하기)
(주) 4878 부산일보사 일구 중로 385-161 | 051-481-4384

메일링서비스(2020.07.01.)

- 사업명

“산재 사망을 줄입시다” 온·오프라인 연중 캠페인

- 실적

신문지상 캠페인 13회, 카드뉴스 12회, 전문가 칼럼 10회, 우수사례집 1종 1000부, 기획 광고 7회 등

- 내용

- 신문지상 캠페인(1면)
 - ‘야간작업=2급 발암물질’이란 사실 아시나요?(06.18.)
 - 코로나19로 배달 급증… 종사자 안전대책은 제자리(07.23.)
- 카드뉴스(홈페이지)
 - 해외 안전문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10.05.)
 - 슬기로운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생활(11.11.)
- 전문가 칼럼(1면)
 - (김광일)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06.25.)
 - (허억)‘안전사고 Zero’에 도전하는 듀폰의 경영철학(07.16.)
- 우수사례집
- 기획 광고(전면 규격)
- 안전보건 영상(유튜브)
 -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 미리 알고 준비하자! 산재 탈출 넘버원!!(04.28.)
 - 찜통 날씨 주의! 더위로 인해 체온이 오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07.08.)



창간 31년

안전신문



1989년 5월 1일 창간 제1480호

safetynews.co.kr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K-방역 우수성 세계가 인정... 각국 자료 요청 쇄도

국내 산업현장 적용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13개국 17개 안전기관에
안전보건공단 제공 나서

국내 산업현장에 적용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전 세계 13개국에서 요청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진 방역시스템이 세계각국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경험지도를 해외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국제사회로부터 합의를(SSA), 독일, 네덜란드(ISO), 싱가포르, 싱가포르(ISO) 등 13개국 17개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제공한 자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 및 점검리스트 ▲노동자 예방수칙 ▲마스크 종류 및 착용방법 ▲장부 및 공단의 코로나 대응 우수사례 등 핵심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등이다.

또 자료에는 국내 방역 우수사례로 사업장 내 감염관리 발생지 대응지침, 사업장 방역 체크리스트,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에 역사가술을 기반으로 한 'T내용(Team(전진), 에픽소(Epic), 원자관(Atom))'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마스크 판매정보 공개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은 제공된 코로나19 자료를 안전보건공단 일본 총재에게 공개해 각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산업현장에 적용한 코로나19 대응 경험지도를 해외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사진은 안전보건공단 전경).

알립니다

안전신문 유사 사칭 주의 요청

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 등에 안전신문사의 관련 내용 게시 및 저의 신문사에 묻어 등 확인 요청이 있기에 저희와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 안전신문사는 1989년 창간 이후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전설적인 나 사업장 등에 불법이나 자료를 갈래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안전신문사 기사를 사칭하며 해자를 갈래하거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용하지 마시고 사실 확인을 필요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신문사와 범종이 유사한 어떠한 신문사도 저희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히오니 독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02-2275-3408

안전신문사

매이론 무더위... 식중독 주의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0년(2010~2019년) 30건의 식중독 사고로 8만270명이 병원 신세를 지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0년(2010~2019년) 30건의 식중독 사고로 8만270명이 병원 신세를 지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020년 안전신문 연중 기획 캠페인 '야간작업을 줄입니다' 편리한 뒤편 새벽을 밝히는 그들이 사는 세상이 공금하다

'야간작업=2급 발암물질' 이란 사실 아시나요?

“살을 빼는 새벽 배송·야간작업”
고객만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세상
기업은 소비자 편의만 앞세우지 말고
투입되는 노동자 안전도 함께 고민해야

자기 전 스마트폰을 켜고 전 문안까지 불을 켜고 자는 새벽 배송이 인기다.

이제 주문한 것이 오늘 아침에 ‘출’ 오는 시대의 속도를 못 따라가. 밤새 포장 프레스를 돌릴 유통기업들이 줄줄이 새벽 배송에 나서고 있다.

유통기업의 소비자는 빠른 배송에 만족감을 표하지만 누군가는 밤과 휴식은 더 필요하다.

입계가 새벽이 있는 삶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새벽 배송에 뛰어드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희생하는 부분만 수면과 휴식이 수반에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밤새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는 건강피해뿐만 아니라 더 나은 새벽, 윤리대행이 될 정도로 늦게 출근하는 수직자 안에 담겨 밤새 발로 뛴다.

그러나 ‘살리기’ 안에는 분란수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개인 유라비 등이 건강피해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한다. 또 이들은 자에 타고 내리는 시간도 야간에 위험한 길 앞면에서도 차 뒤에 매달려가야 일한다.

2017년 8월 3일 계명대학교의 종사자 노동조합은 코넥스 모드(계명) 총회를 앞두고 야근과 방학을 반박하는 기간으로 총 20대 계열 계열사가 야근을 자제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장변방위원회의 “20년 전 1교수간 불협화음 야간작업”을 조조근로자가 지수했고 특히 19년 4학년 한수원(2017년)은 2017년 7월 7일에 일요일인 근로시간은 80시간으로 확인됐다”며 “2017년 7월 7일에 전업전원 내역상 노동법 기지직현도 확인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코넥스의 입무와 사관과의 신념과 인격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야간작업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7년 지속적 야간작업이 유방암과 같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야간작업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남, 다이어트, 저하상과 같은 등이다. 야간작업의 그반복 상각한 전장상 문제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노동계에서도 야간은 야간은 이미 오래전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7월 안전보건보건 강조주년을 맞아 “장기미의 건강권 확보와 산업현장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야간작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세미나 지정포럼으로 나선, 장정숙 안전지은 환경정책연구소의 의장은 상해에 노출된 환경정책연구소의 야간작업이 줄어 들면 산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장정숙 의장은 “정기적 야간작업이 2011년 환경지은의 모두를 주간작업으로 전환하여 야간작업이 49%나 감소된다”고 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야간·제비작업으로 야간은 작업환경에서 폐인·폐인 및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은 상해비율, 제비 폐로 누락으로 위험대처능력이 저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작업의 부작업을 반영, 연구 결과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정해선 카톨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임미정 연구원은 야간작업을 하는 여성이 비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8년)에 참여한 여성근로자 3만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야간(나 2교대근로)을 하는 여성이 비탄 가능성이 1.7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야간근로는 폐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비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야간근로를 하면 운동 등 제비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탄을 초래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은숙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장은 “야간작업은 작업 중 사고의 주요인으로 피로, 수면·위생과 같은, 뇌 심혈관질환, 암 등에 영향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자의 수면 보장을 기초로 한 건강권과 근로조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직, 휴 일하는 새벽 배송과 야간작업이 고객만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며 “합리화는 소비자 편의만 앞세우지 말고 야간, 휴 일하는 새벽 배송과 야간작업이 고객만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일어난 스텔라산 위험 노동자 건강권, 그도 야간작업 중 중했다.

특별취재팀

새로운 안전방송을 YouTube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홈에서 '안전신문'을 검색해 ▶ 구독 과 👍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한국가스공사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가스공사

#힘내라_대구경북 #힘내라_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응원합니다

이 새싹은
나중에 울창한 숲을
만들 겁니다

신문지상 캠페인(1면) '야간작업=2급 발암물질' 이란 사실 아시나요?(06.18.)



○○○ 사고는 다음이 없습니다

01
산재사망

우리의 산업현장은 매년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6

**지난해 산업재해로
노동자 2020명 목숨 잃어**

산재사망자 50인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다발
코로나19로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보건의식
산재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 모아야

”

세계는 현재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하루에도 수만명이 숨지고 누적 사망자가 수십만에 달하는 등 세계대전급 전쟁과 비슷한 재해가 발생 중이다. 경제적 피해는 더 크다.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많은 이들이 고동을 겪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 실행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노력 중이다.

국내 상황도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260여명이 사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만큼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 다행스럽게도 전국민이 합심해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이 위안거리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산업재해다.

최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이 사고가 대표적인 산업재해 사례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일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총 1872만5160명 중 재해자수,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

... 근로자를 사고로부터 ...
산재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 모아야

07

우수사례집(내지)



**‘산재사망을
줄입니다’
캠페인**

사고는 다음이 없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주)안전신문사

12 2020년 10월 25일 목요일 전면광고 제1494호 안전신문

이 캠페인은 산업보건공단과 안전신문사가 함께 합니다

↓ 산재사고사망
예방으로 줄입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설치하고착용하면

안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개인보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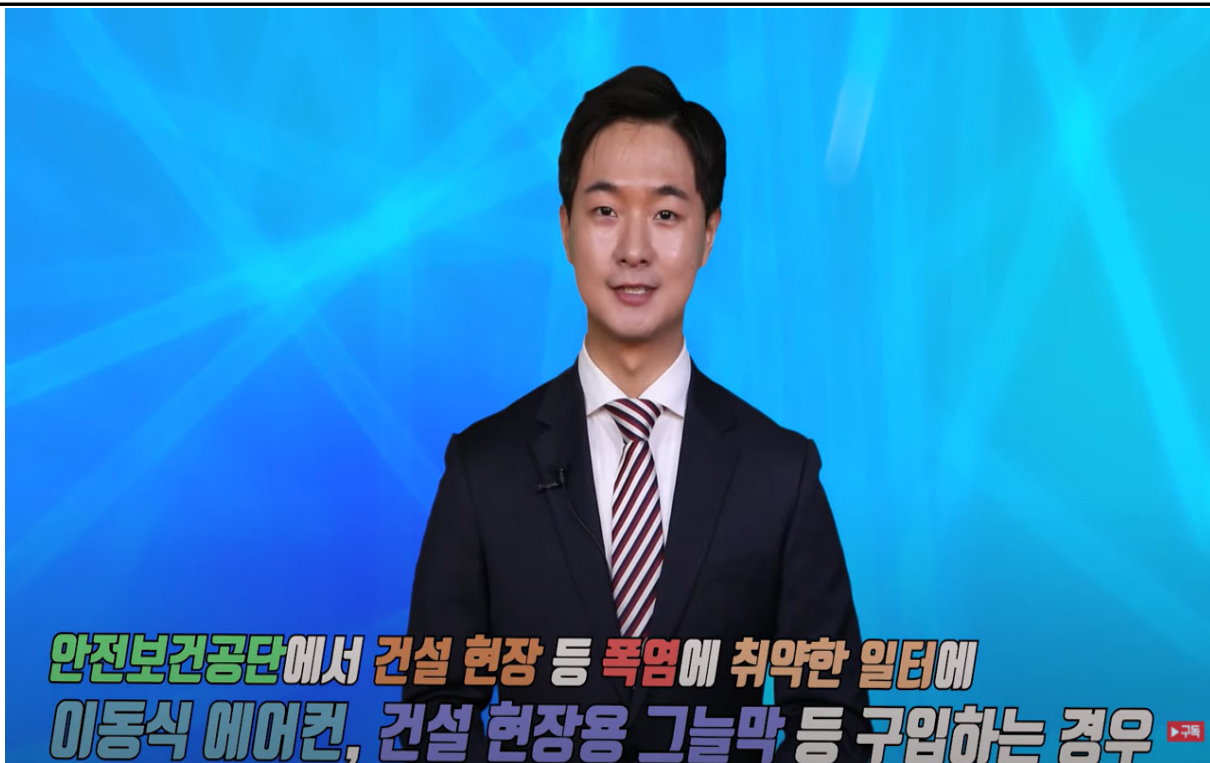
막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우수사례집(표지) 기획 광고



안전보건 영상(유튜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 미리 알고 준비하자! 산재 탈출 넘버원!!(04.28.)



안전보건 영상(유튜브) 찜통 날씨 주의! 더위로 인해 체온이 오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07.08.)

● 사업명

산업 안전 기획기사

● 실적

기획기사 4회, 기고 1회

● 내용

- 기획기사(2020.07.13.)
 - (상) 다시 늘어난 조선업 사고사망...
열명 중 여덟명은 하청업체 직원(10면)
- 기획기사(2020.07.28.)
 - (상) 산재사망 78%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사업주 안전교육 의무화해야(8면)
- 기획기사(2020.11.02.)
 - (상) 일요일 건설업 사망사고를, 평일의 2배...
현장관리 고삐 늦춰선 안돼(9면)
- 기고(2020.11.04.)
 - (우) 화재만 막아도 건설업 사망사고 준다(25면)
- 기획기사(2020.11.06.)
 - (상) 건설업 사망사고 작년보다 11% 증가...
소규모 사업장 추락사 빈발(11면)

10 2020년 7월 15일 월요일

경제

이데일리

다시 늘어난 조선업 사고사망... 열명 중 여덟명은 하청업체 직원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 '위험의 외주화' 막아라

최근 커터르 국영 석유공사(QP)로부터 23조5000억원 규모의 해양안전기초(NIG) 원전선 건조 사전 계약을 따내며 '조선'의 위상을 재확인한 한국 조선업계가 후진적인 산업체로 사회적으로 인접 물살을 얻고 있다. 가파른 나날의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조선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10명 중 여덟명이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업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연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올해 들어 안전사고 4건이 속지면서 업계 전체 안전사고 사망률을 끌어올렸다. 지난 5월에는 고령노동부의 안전보건 특별감사가 종료된 지 하루 만에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질식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산업계 개편으로 원형 책임 강화

12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10년(2010~2019년) 조선업 사고사망인원(연평균 사망자수)은 구 분하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9년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현대중공업 등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 한 것이 사망인원을 상승시켜 아이러니한 이면 우려가 크다. 2011년 이후 선박 수 주물량이 줄면서 산업체도 함께 줄었으나 조선업의 회복과 함께 사고 사 고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조선업 사고사망률 평균 2배 업종 회복하면서 산재 늘어

하청업체 열악한 작업환경 원인 원형 산업체 책임 중요

정부 '산업안전보건관리' 도입 사업장별 지도·불사순찰 강화

특히 최근 10년 추세를 보면 조선업의 사고사망인원은 수주업체 외에 선박 건조업체에 급증했다. 2018년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전체 조선업 사고사망인원보다 2배 가까이 됐다.

2019년 전체 업종 사고사망인원은 0.53명(2018년 0.41명)에 비해 조선업은 1.07명(2018년 0.53명)에 달했다. 이는 전 업종 대비 조선업 사고사망인원은 2.01배(2018년 1.29배)에 달했다. 2017년 1.01(전업종 0.52) △2018년 0.41(전업종 0.51) △2019년 0.46(전업종 0.46)이다. 지난해 조선업 산재사망은 9명이었다. 올해는 상반기 현재 6명이다. 아직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간 개선된 수주물량 증가로 인해 산재는 약간 줄었다는 점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조선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 7월 조선사 5곳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모여 사고 사망재발 감 소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진행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고사망자 수(명)	24	25	25	20	7	9
하청업체	23	20	18	17	6	7
사망사고 인원(명)	1.11	1.07	1.09	1.01	0.41	0.63
전업종	0.58	0.53	0.53	0.52	0.51	0.46

가장 큰 문제는 조선업 산재 사망사고 10명 중 8명이 원형이 아닌 하청, 협력업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조선업 사고사망자 총 235명 중 협력업체 작업자 193명(82%)을 차지했다. 위험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맡기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 7월 조선사 5곳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모여 사고 사망재발 감 소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제도를 도입했다.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K812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정책지원이다.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

공제금 납부 금지

중정기 폭탄 마련

연 복리 이자 지급

마음 가득 오래오래~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입니다

사업장별 지원: 대한민국 사장님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후 기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간 최대 지원액: 500만 원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앱 스토어에서 노란우산 다운로드 받으세요!

K812 중소기업중앙회

경제·금융 전문가 기준금리 전망

이름/소속

이름/소속

이름/소속

이름/소속

이름/소속

이름/소속

이름/소속

이름/소속

이름/소속

이름/소속

이름/소속

이름/소속

전문가 11명 중 10명 "기준금리 연말까지 동결"

16일 금융위... 금리 방향 물으니

금리 심화하향·부동산 과열 고려 '코로나19 재확산' 추가 인하 변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 뒤 "심화하향이라는 개념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 상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인하로 심화하향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국내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은 오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0%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존 정책 효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데일리가 12월 국내 경제·금융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특히 11명 중 10명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1명만이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이미 기준금리가 심화하향(통화정책이 유동성 공급에 한한)에 가까워져 내려가는 점에서 추가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창섭 현대증권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전망이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는 심화하향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불경기 시나리오를 유지해왔으나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백은근 코브증권 연구원 역시 "경기 회복 단계로 접어들어 금리 인하는 한국

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심화하향 수준으로 낮추는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당분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 뒤 "심화하향이라는 개념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 상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인하로 심화하향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국내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은 오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0%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존 정책 효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데일리가 12월 국내 경제·금융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특히 11명 중 10명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1명만이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이미 기준금리가 심화하향(통화정책이 유동성 공급에 한한)에 가까워져 내려가는 점에서 추가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창섭 현대증권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전망이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는 심화하향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불경기 시나리오를 유지해왔으나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백은근 코브증권 연구원 역시 "경기 회복 단계로 접어들어 금리 인하는 한국

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심화하향 수준으로 낮추는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당분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28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 뒤 "심화하향이라는 개념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 상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인하로 심화하향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국내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은 오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0%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존 정책 효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데일리가 12월 국내 경제·금융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특히 11명 중 10명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1명만이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이미 기준금리가 심화하향(통화정책이 유동성 공급에 한한)에 가까워져 내려가는 점에서 추가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창섭 현대증권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전망이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는 심화하향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불경기 시나리오를 유지해왔으나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백은근 코브증권 연구원 역시 "경기 회복 단계로 접어들어 금리 인하는 한국

〈50인 미만〉



다시 뛰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를 돌파한 27일 서울 강남 빙셀 강남센터 전광판에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167

일요일 건설업 사고사망률, 평일의 2배... 현장관리 고삐 늦춰선 안돼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 안전관리에는 휴일 없다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이 사고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0명 중 6명이 추락사로 사망했으며 평일 근무보다 동반 작업자나 안전 관리 책임자가 부재한 일요일 근무에는 산재 사망률이 2배 이상으로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사망사고 10명 중 6명 추락사

1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6~2018년 3년간 종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건설업 사망자는 131명으로 전체 재해 사망자(2575명)의 5.1%에 달했다. 이어 제조업(167명, 6.5%), 기타업종(59명, 2.3%) 순이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근 3년간 발생한 사망사고와 사망 사고 요인을 상세 분석한 것은 사망 사고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업무상 산재 사고사망률 줄일 수 있어서다. 연구원은 종대재해조사 보고서 중에서 일반 재해는 제외하고 재해 발생을 기준으로 사고사망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건설업 재해 사망자는 2016년 44명(52.1%), 2017년 45명(51.3%), 2018년 42명(48.8%)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 차지했다. 건설업에서 사망사고 중 추락사, 떨어짐 사고가 60%를 차지했다. 2018년의 경우 건설업 사망자 중 24명(59.8%)이 떨어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20여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이 주로 발생했다. 전체 사고 사망자의 72%가 20여명 미만 소규모 현장

관리자 부재·1인 근무로 안전 취약
사고사망 발생위험률 65% 달해
72%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안전공단, 올 6만개 현장 순찰 점검
고위험 사업장은 고용부 행정조치

건설업 주요 사망사고 발생 분포



에서 발생했다. 건설업에서 공사 급박함, 사고사망 분포를 보면 2018년 △20여명 미만 269명(72.1%) △20여~100여명 74명(19.8%) △100여명 이상 30명(8%) 순이었다.

건설업에서 일요일 산재 사고사망 발생 위험률은 평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일요일 근로자수와 사망자수 비율을 분석해 사고발생 위험률을 계산한 결과 건설업의 경우 평일 사망자 비율은 36.2%였다. 이에 반해 일요일은 무려 64.9%에 달했다. 평일보다 일요일 작업 현장에서 사고사망 발생 위험률이 2배가 가까이 높다는 얘기다.

일요일에 안전보건관리자가 근무를 하

지 않거나 근로자가 혼자 근무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웠다.

분석 보고서를 쓴 조은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원은 "일요일에 근무한 사람수에 비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위험률이 더 높았다"며 "휴일에 혼자 근무를 하는 상황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탓에 일요일에 근무시 안전, 사고예방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별별 사고사망 발생을 분석한 결과 업종과 관계없이 50대 이상 사고사망자 수가 3년간 전체 사고사망자 수의 60%를 차지했다. 건설업에서 2018년 기준 50대 사고사망자는 39.4% △60대 이상 36.3%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사고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75% 이상으로 집계됐다. 50대 이상 종사자가 많은 건설업 특성상 사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공단 안전점검 페트볼카 59대 투입
안전보건공단은 작년 하반기 총 7000여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3만5000회 이상 점검을 실시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업, 그중에서도 소규모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순찰 점검 페트볼카를 방치할 경우 추락사고 예방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 대비 전 업종에서 사망자 수가 급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에도 페트볼카 방식으로 건설현장에 순찰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6만개 현장으로 확대했다. 현장 순찰 점검을 위한 전용 페트볼카도 32대를 현장에 추가로 투입해 올해 59대를 운영 중이다.

페트볼카가 건설현장 밀집지역을 순찰하면서 안전 관리 인력분산을 병행해



안전보건공단은 페트볼카를 운영해 건설현장 순찰 점검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페트볼카 차량에는 화재·폭발 예방 장비도 구비해 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 대응 지원도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순찰하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건설현장은 전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작업자의 보호구 미착용이나 안전대 불량, 안전간판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등

불안전한 행동은 현장에서 사망조치를 한다. 점검을 거부하는 현장이나 시정조치를 개선하지 않는 등 고위험 불량 현장은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08개소 건설현장에 행정조치를 연계했다. 김소연 기자 sykim@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순찰하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건설현장은 전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작업자의 보호구 미착용이나 안전대 불량, 안전간판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등

불안전한 행동은 현장에서 사망조치를 한다. 점검을 거부하는 현장이나 시정조치를 개선하지 않는 등 고위험 불량 현장은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08개소 건설현장에 행정조치를 연계했다. 김소연 기자 sykim@

'잔내 나는 땅'이 국내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오후 3시면 완충... 2.7만가구 전기 자급 가능

전남 해남 '솔리시드' 가보니...

열도 높은 공유수면 재생도시 개발
세계 최대 306MW급 ESS 설치
전선 자중하-안전 환경 '두 토끼'
'RE100' 전용 산업단지 구축 추진

목포에서 20분만 차를 타고 해남 군으로 내려가면 해남읍이 펼쳐진다. 1981년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육지로 모습을 드러낸 공유수면 일부를 토양의 염분 농도가 떨어 정수적인 농사는 힘들다. 오랜 시간 방치된 이 땅은 이제 태양과 바다의 도시라는 뜻의 '솔리시드(solar sea)'로 재탄생했다.

지난달 30일 찾은 솔리시드는 마치 영화속 미래도시 같았다.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한 영랑이 구도 해남군 구정지구 부지 158만㎡(48만평)에 조성됐는데 축구장 190개를 모아놓은 아메리칸 규모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전체 조망은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 봐야 한다. 솔리시드 태양광 발전지는 바람에 나부끼는 것만으로도 눈길 끌려져 있다. 지난 6월말 준공됐고, 오는 2039년 말까지 20년간 운영한다.

솔리시드 발전소에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약 120GWh다. 해남군 인구(4만9000가구) 3분의 1인 2만 7000가구가 1년 동안(7가월 월 400kWh)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양이다. 태양광 발전이 시작하면 대부분 전기는 일단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다. 이날 구를 한참 걷는 날씨에서 오후 3시경 이미 총발전이 90%에 육박했다. 저장된 전기는 54미터 방전을 시작해서 124까지 한국전력으로 보내진다. ESS 용량은 306MWh로 세계 최대 규모다. 화력발전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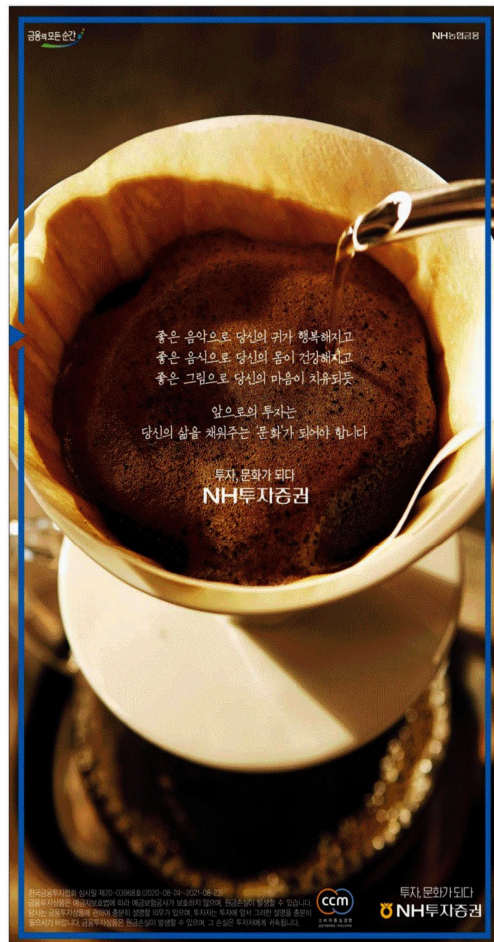
전남 해남군 신안면 구정리에 있는 '솔리시드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 중앙에 자리한 ESS 저장시설이다. (해남시청 제공)

있는 전선으로 땅 밑으로 깔아서 걸음만 면서도 전파와 노출 우려도 없다."

김동해 솔리시드태양광발전사업소 현장소장은 "부지 48만평 중 12만평은 녹지"라며 "태양광 발전소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논리를 수리하고 있고 고라니가 살 정도로 친환경적 시설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건물을 제외하고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도 않아 사용연수 20년이 지난 후에는 오염물질 환경 없이 깨끗하게 해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솔리시드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만을 100% 사용하는 'RE100'에 참여가 가능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기업에 개별계약해 맺고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구매계약(PPA)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상 발전사-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장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려는 기업에게 솔리시드 입주가 최선의 대안인 이유다.

해남시청-김동해 2기 yoon@



기획기사(2020.11.2.) - (상)일요일 건설업 사고사망률, 평일의 2배... 현장관리 고삐 늦춰선 안돼(9면)

건설업 사망사고 작년보다 11% 증가... 소규모 사업장 추락사 빈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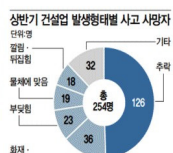
▲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 건설현장 추락사 막아라

지난 3월 정주시 지공공사 현장에서 차마 마감처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발을 헛디뎠다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A씨는 안전고리 없이 작업할 판 위에서 건물 가림막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4m 높에서 지하 1층으로 떨어지 목숨을 잃었다.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작년보다 10% 이상 다시 늘었다. 정부와 산업계에 사망자 수를 72명 이하로 줄여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반발해버려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열노동과 안전보건공단은 연말까지 건설업, 추락사 예방에 집중한다는 게 화제다. 현장 점검을 40곳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살피비율을 최대 300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 사망사고 나흘로 증가

4월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명)보다 10.9% (2명) 증가했다. 대부분은 업종에서 산재 사고가 아닌 줄받지 건설업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업에서 발생한 4건의 사망현황을 보면



상반기 건설업 공사규모별 추락사 현황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9월까지 지공 2만 5000개 건설현장에 대해 3만 2000여회 현장순찰 활동을 점검을 실시했다.

상반기 추락 사고사망이 136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소화대 폭파·파열 36명, 스카프 2명, 스카프에 맞은 1명, 스카프·유압식 18명, 스카프 32명이었다. 건설업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공사현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1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사의 10명 중 9명이 중소규모 사업장이었던 셈이다. 특히 50억 미만 현장에서 10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현장은 대규모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부족하고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다. 이 사고로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공단, 건설안전지킴이 400명 투입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규모 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추락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순찰(메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목표를 3곳에서 6곳으로 두 배 확대했다. 추락사고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미착용 등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추락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단은 겨울철을 앞두고 용량·용단자점수 불타에 의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가연물을 격리하고 화재예방 살피, 시설물 안전 상태 등도 점검한다.

공단은 올해 9월까지 메트를 점검을 모두 2만 5000개 건설현장에 대해 3만 2000여회 실시했다. 이중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현장 120곳은 고용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건설안전지킴이도 400명 투입했다. 건설안전지킴이는 건설실무경력이 있는 직종인 산별 안전관리요원을 현장 상시 순찰활동을 통해 산재 예방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들은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2인 1조로 방문해 추락사고

와 화재예방 위험을 집중 감시한다. 위험 단계에 따라 현장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건설안전지킴이는 9월말 기준 약 6만 5000회를 순찰했다. 현장 순찰활동 후 안전조치가 불만하거나 미흡한 현장은 페트를 점검을 병행해 개선조치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신속·정확한 현장 지원을 위해 건설현장 정보를 종합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건설안전지킴이 순찰활동을 비롯해 메트 점검,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정보 등을 종합 정리한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해 위험관리나 위험지역 사기에 따른 현장 밀착 지원을 펼칠 수 있다. 공단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고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살피비율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총 554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현장 안전을 높여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살피비를 경우 입자 비용과 안전현장 구상비용을 지원한다.

건설안전지킴이

공통기: 안전보건공단

반도체·車 쌍끌이... 경상북도 2년 만에 100억弗 회복

9월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반등에 힘입어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2년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9월 이후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당초 연간 전망치를 넘어서 지난해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5월 한도가 발표한 2020년 9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02억1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폭이 24억5000만달러 확대됐다. 지난 5월(22억9000만달러)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행진 이어가면서, 지난 2018년 9월(11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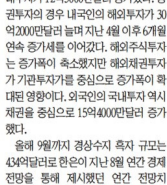
9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수출 회복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130억2000만달러로 전년동월(87억달러)보다 33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이 지난 2월 이후 모두 증가 전환 가운데 수출이 크게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12.4%), 화장품(6.6%), 승용차(24.3%)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489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달(461억6000만달러)보다 흑자가 36억9000만달러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23.2%), EU(15.4%), 중국(8.2%)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수입은 에너지류 가격 하락에도 반도체 제조장비(15.5%)와 승용차(37.2%)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와 소비재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374억7000만달러)보다 소폭 늘어난 378억3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는 20억4000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전년동월 대비 2억2000만

한은 9월 국제수지 잠정치 발표

상품수지 120억弗-전년비33억弗 ↑
반도체 수출 21%·승용차 24% 증가
코로나·美대선 불확실성 변수로



러 축소했다. 여행수지가 개선되고 항공 화물운송수입 증가로 운송수지도 개선된 영향이다. 여행수지는 4억3000만달러 적자폭이 전년동월(-8억1000만달러) 대비 적자폭이 3억7000만달러 줄었다. 운송수지는 항공여객운송 감소에도 해상과 항공화물 운송수입 증가로 2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배당·이자 등의 움직임을 본연소득수지는 전년동월 대비 흑자폭이 9억3000만달러 축소된 6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국내기업의 해외발판으로부터의 배당·이자 수입은 감소하고 외국인직접투자발판의 배당·이자 수입은 늘어난 영향이다.

박상현 한은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해외 현지 발판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면서 배당·이자 수입이 줄고, 외국인 투자자간 국내 IT기업의 배당·이자

늘어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적자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9월 89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2억6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2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0억2000만달러 늘어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주식투자는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해외채권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증권투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역시 채권을 중심으로 15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34억달러로 한은이 지난 9월 연간 경제전망을 통해 제시했던 연간 전망치(540억달러)의 80%를 넘었다. 한은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수출 개선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전망치를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줄어든 44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 달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조달업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하루 평균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5.6% 상회하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박 국장은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연간 경상수지 54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지난해 흑자폭(600억달러)에도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하방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은경제기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개시... 112만 농가에 2조2753억 규모

올해 총 2조2753억 원의 공익직불금이 112만 농가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4분기에는 1200만 농가의 소농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지원사업에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직불금)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9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12월 공익직불법 제정 통과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2조2753억 원으로 총 112만 1000 농가·농업인이 대상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17억 원(43만 1000 농가), 농업인(표준) 단위 연직직불금은 1조 7599억 원(66만 농가)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위를 상향함에 따라 지급 대상자들의 수와 금액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의 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경작규모별로는 0.1ha 이상·0.5ha 이하 직불금 총액은 5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2.4%를 차지했다. 이는

기전 비전인 10.6%(1306억 원)보다 11.8%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농가(36만 1000ha)는 8016억 원, 농업인(104만 7000ha)은 3784억 원, 농업·농촌 직불금의 비중은 16.2%(1996억 원) 대비 12.1%포인트 늘었다.

세종=이경희 기자 wonco@

좋은 음악으로 당신의 귀를 행복해지고
좋은 음식으로 당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그림으로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듯

앞으로의 투자는
당신의 삶을 채워주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주요투자처: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사채, 해외사채, 국내신탁, 해외신탁, 국내펀드, 해외펀드, 국내REIT, 해외REIT, 국내ETF, 해외ETF, 국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국내금융상품, 해외금융상품, 국내보험상품, 해외보험상품, 국내연금상품, 해외연금상품, 국내기타상품, 해외기타상품

기획기사(2020.11.6.) - (상)건설업 사망사고 작년보다 11% 증가...소규모 사업장 추락사 빈발(11면)

● 사업명

산업재해 예방 훈포장 유공자 공적영상 및 다큐멘터리 영상

● 실적

영상 3편 / 송출 6회

● 내용

- 안전보건 강조주간 훈,포장 유공자 영상 제작 및 송출 (2020.07.07.~07.10)
- 훈,포장 유공자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및 송출 (2020.07.24.)
 - 동탑산업훈장 정미경 한국방송공사 보건관리자
- 훈,포장 유공자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및 송출 (2020.07.28.)
 - 철탑산업훈장 박성일 (주)한라 현장소장





● 사업명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

● 실적

영상 3편 / 송출 312회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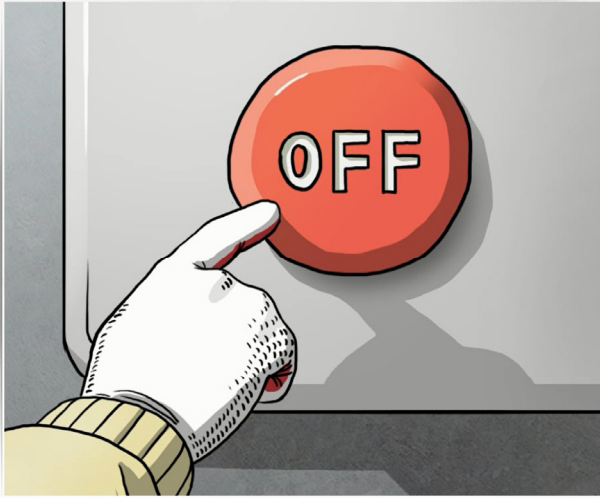
-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 1편
(2020.09.09.~10.08.)
 - 건설업 추락사고
-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 2편
(2020.10.12.~10.31.)
 - 제조업 끼임사고
-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 3편
(2020.11.02.~11.22.)
 - 지게차 충돌사고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 수칙 캠페인 1편 (2020.9.9.~10.8.) -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①

기계의 정비, 점검, 청소작업 시
기계 가동을 정지하고
전원을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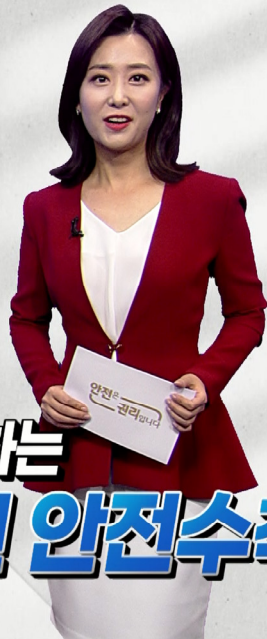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 수칙 캠페인 2편 (2020.10.12.~10.31.) -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

지게차 충돌주의!

운전은 천천히 사람은 조심히

지게차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4대 악성 사망사고 예방 안전 수칙 캠페인 3편 (2020.11.02.~11.30.) - 지게차
충돌사고 예방

- 사업명

안전문화 확산 안전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 실적

안전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기획 기사 추진 등

- 내용

- 안전메시지 캠페인
 - 사업장 등 찾아가는 안전메시지(엽서) 캠페인을 추진하여 안전보건의식 고취
 - 비대면 메시지 공모전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 도모
- 기획기사
 - 이주여성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 기획취재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 및 외국인에 대한 포용 중심사회 구축



안전메시지 공모전 홈페이지



안전메시지 공모전 5단광고 이미지



안전메시지 캠페인 리플렛



안전메시지 캠페인 리플렛

비대면 메시지 공모전



파머스가든 안전엽서 캠페인



파머스가든 안전엽서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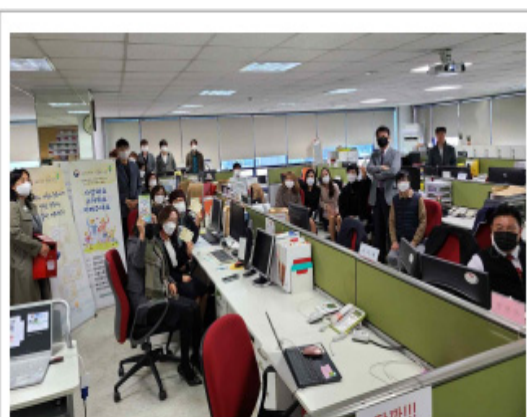
일산호수공원 안전엽서 캠페인



일산호수공원 안전엽서 캠페인



메리츠화재 평택본부 안전엽서 캠페인



메리츠화재 평택본부 안전엽서 캠페인

찾아가는 안전메시지(엽서) 캠페인

● 사업명

산업안전 캠페인

● 실적

온라인 배너 2회 (2개월) 및 기획기사 2회

● 내용

- 온라인 배너(2020.6.30. ~ 2020.8.30.)
 -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물·그늘·휴식 (캠퍼스잡앤조이·모바일한경)
- 기획기사(2020.10.23.)
 - 산재 사망 절반이 건설현장 ... 6만곳 불시 점검 (12면)
- 기획기사(2020.11.05.)
 - 건설 추락사 90%는 중소 영세현장 근로자 (13면)

● 사업명

‘산재는 범죄다’ 시리즈

● 실적

기획기사 3회, 특집기사 1회

● 내용

- 기획기사(2020.08.04.)
 - 567만원 ... 기업이 치른 노동자 1인 ‘목숨값’(1면)
 - (상) 참사 부추기는 숨방망이 처벌(3면)
- 기획기사(2020.08.05.)
 - (중) 외출 타는 노동자(1면)
 - (중) 외출 타는 노동자(3면)
- 기획기사(2020.08.06.)
 - (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5면)
- 특집기사(2020.08.13.)
 - 테스크 시각 “오늘 또 노동자가 죽었다”(18면)

185



국제신문



1947년 9월 1일 창간 대표전화 (051) 500-5114

부울경 최고신문 kookje.co.kr

〈3판〉 제20614호 2020년 8월 5일 수요일

해기사 현장 실습 부당노동행위 ‘숨방망이’ 대책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실습계약 미제결 등 선사에
250만~360만 원 과태료
인권단체 “생색내기 그쳐”

정부가 지난 2월 한국해양대생이 해기사
현장 실습 도중 숨진 사건(국제신문 2월
12일자 10면 등 보도)과 관련해 실습생
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놴. 그
러나 규정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
당 선사에 250만~360만 원의 과태료를
을 물린다는 것이 핵심이어서 ‘숨방망이’
가 제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
부가 지난 1차 개정 지침을 살피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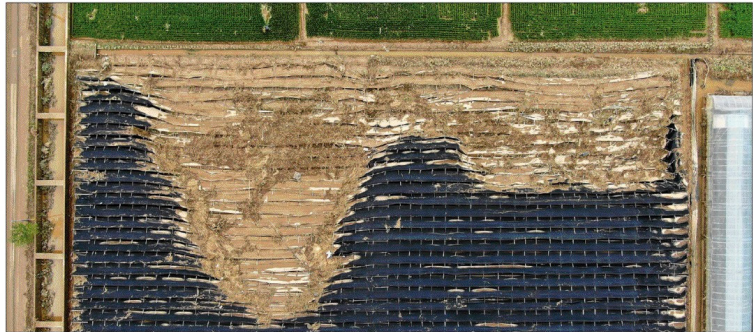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
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
다. 개정안의 요지는 선사가 해기사 현장
실습생과 승선 실습 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조항 신설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선박직원법’ 개
정을 통해 현장실습 때 실습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제재 수위는 실습 계약 미제결
이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때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다. 또 실습 계
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선
사는 25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이는 해양대생 사망 당시 강력한 실습
생 권리보호 대책 수립 의지를 밝힌 정부
와 약속과는 상반된다. 인권단체 등은 정부
의 ‘생색내기’라고 평가절하한다. 이 정
도 과태료로는 실습 현장의 인권유린 행
위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앞이 낮은 과태료 외에 더 이상의 제
재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에는
벌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는
조항만 있을 뿐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취
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없다.

해수부 측은 “과태료는 유사 사례를 참
고해 산정했다”면서 “2차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맞지만, 오는 19일부터는 과
태료 부과와 병행해 실습생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실습 운영 실태 점검
의무화 등을 담은 각종 법률도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어서 인권유린 행위가 크
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고 해명했
다.

열혈한 기자 haerem@kookje.co.kr



폭우로 무너진 한강 인삼밭. 4일 충남 천안시 수산업 한 인삼밭이 전날 내린 폭우로 무너져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4명이 숨
고 12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7명이다. 이재민은 629세대 1025명이며 지역별로는 충북이 555명으로 가장 많다. 개펄과 강 호수가 이어져 도로와 철도 곳곳은 여전히 막혀 있다. 연합뉴스

기일이 된 한가위... 참사 예견된 현장에 노동자만 출근했다

신생의 기업범죄

〈중〉 외출 타는 노동자

민족 최대 명절에도 누군가는 일한다. 풍
습 몇몇 모아서 때론 만들었다고 욕심부
리는 게 아니다. 고용주가 ‘일하러’고 시
키면 노동자는 가족을 뒤로한 채 집을 나
사야 한다. 신분이 불안정한 하청·재하
청 노동자일수록 고용주의 요구를 뿌리
치기 어렵다. 다단계 고용 구조 ‘면 아래
에 있는 노동자’는 남들 다 쉬는 명절에도
제 몫을 부려야 한다. “어쨌든 ‘정당한
권리’를 내세웠다가는 ‘부당’한 해고 등
격정할 수밖에 없다.”

안전 책임자도 없는 명절연휴
일터 불려나온 하청 노동자들
위태로운 작업 중 사망·중상
‘불의의 사고’가 아닌 인제

국제신문이 분석한 2017년~올해 5월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관건문(부산지역 법원 확정판결 81건)
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러 있다. A(당시
40) 씨도 그랬다. 2017년 10월 8일, A
씨는 부산에서 경북의 한 건물 신축 공사
장까지 일하러 갔다. 재해 역시 명절이라
고 쉬지 않았다. A 씨는 건물 3층 높이

(10m)에서 떨어져 고관절을 다쳤다. 급
속철도 유리 설치업체 노동자인 A 씨와
동료 B(당시 47) 씨는 건물 정면에 하나
당 52kg짜리 유리 47개를 끼우라는 지시
를 받았다. 회사가 한 하청 건설사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작업이었다.

A, B 씨는 곤돌라(건물 옥상이나 중
간층에 로프를 걸어 와해이나 층의 보수
등에 사용하는 간이 비계)를 타고 건물
외벽을 올랐다. 10m 상공에서 이뤄진
불안한 노동이었다. 두 하청 노동자는 곤
돌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와해에 고리를
걸었다. 그런데 이 고리가 풀리면서 곤돌
라와 건물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 동시에
곤돌라는 한쪽이 아래로 기울면서 크게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어버린 두 노동자
는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했다.

A 씨는 전치 13주의 중상을 입었다.
그가 응급 치료를 받을 때 동료 B 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B 씨는
중증 뇌 손상으로 숨졌다. 이들에게 비극
이 들어닥친 날은 추석 연휴였다.

당시 공사장의 안전시설은 매우 부실
했다. 현장에 두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관리자의 아예 없었다. 안전관리 책임자
인 회사 현장소장은 추석 연휴라는 이유
로 출근하지 않았다. 두 하청 노동자에게
대신 재해는 결코 ‘불의의 사고’가 아니
었던 셈이다. 관철한 신생의 활동가 김
영민

▶3면으로 남김

**“이래도
가덕이
안 됩니까!”**

장해를 없이 안전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
미래수요 대응하는 탁상 가능
연간 53백만원 이용 가능
연간 63만원의 장공화물 가능

부울경 신공항 유치
부산은행이 응원합니다!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은행 **BNK 부산은행**

울 수능 12월 3일... 코로나 확진·격리자도 응시 가능

교육부 대입관리방향 발표

오는 12월 3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자
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
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각 시
·도 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대입관리방향을 확정, 4일 발표했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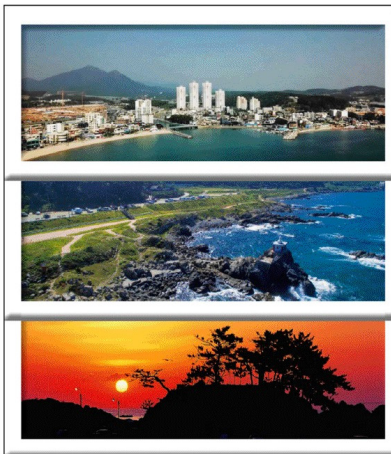
능시험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방역 관
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수
험생에게 응시 기회를 준다는 게 기본 원
칙이다. 교육부는 고3 감염사례 발생으
로 수험생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전
환되지 않도록 수능 일주일~3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학교에 권장
하고, 수능 시험 때는 수험생을 일반 수
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일반 수험생은 발열검사를 한 뒤 사전
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하고, 발
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 여부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지난해
까지 일반 시험실 수험생 입실인원은 28
명이었는데, 올해는 24명으로 줄었다.
교실 내 모든 책상에 전면 가림막도 설치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

생은 치료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
에서 수능을 치른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
해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
격자 수험생은 자가용 이동이 원칙이
고, 필요할 경우 응급차 등을 이용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정철환 기자 hcho@kookje.co.kr
▶관한기 6면

고가리 아래 문화 ‘활력’ >>8
부산국제화향아트페어 >>16



- #일광해수욕장
- #임랑해수욕장
- #오랑대
- #시랑대
- #황학대
- #홍연폭포
- #해동용공사

기획기사(2020.8.5.) - (중)외출 타는 노동자(1면)

폰돈에 기업책임 무마되니... ‘구명줄 뒤흠’은 법규도 추락

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출 타는 노동자

곤돌라 안전난간 한쪽만 두거나 끊어져 있는 로프 선 방치하는 등 안전 관리·감독 소홀한 사업주 법원 질책했지만 결국 낮은 형량 수직 어진 노동자 과실 돌기도

▶▶ 1면서 기사 발을

산업안전보건기준상 곤돌라같은 탑승형 기구는 운반구에 사람을 태워선 안 된다. 내부에는 안전난간 구명줄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 2m 이상에서의 작업을 지시할 때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끔 해야 한다.

■ 기일이 돼버린 환기위

현장은 ‘팔자’와 달랐다. 두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곤돌라에는 안전대를 걸 설비가 없었다. 안전난간은 양방향 중 한쪽에만 있었다. 특히 A, B 씨는 예초 사업주에게서 안전대 자체를 지급받지 못했다. 여기에서 현상조망마저 있었으니, 비극은 어찌 보편 예고돼 있었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현상조망)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도 추측 연유라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 부재했다’며 기일의 안전 불감증을 질책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기업과 책임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자책’ ‘반성’ ‘법’의 등이 어우러졌다. 선고된 형량은 하청 건설사 벌금 400만 원, 재하청 회사 벌금 600만 원, 하청 현상조망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재하청 현상조망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 서툰짜리 청년이 목숨

생애 단 한 번의 법원 출석에 숨겨진 돈 몇 천이 법원 책임이 면제된다. 2018년 4월 24일 배관공 C(당시 29) 씨는 부산의 한 산재 부흥 재조공정에서 배관 용접을 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급게 약을 했기에 ‘남의 공’에서 일했다.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될 무렵 C 씨는 용접

대를 확인하려고 배관 안으로 들어갔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면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이를 감독할 관리자는 없었다.

C 씨는 배관 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다. 아르곤 가스가 원인이었다. 수많은 불법이 확인됐다. 작업장에는 안전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가스가 새는 산소절단기가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작업에 쓰인 와이어로프 중에는 소선(로프 한 가닥에 든 작은 선)이 10% 이상 끊어진 것도 발견됐다. 현상은 ‘불안’의 도가니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불충분한 안전 조치가 결함도 안됐는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형벌은 국민 법 감정의 차이가 컸다. 원형 회사는 벌금 700만 원, 하청 대표사와 원형 전직 공장장은 벌금 500만 원, 원형 현직 공장장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관리·감독 없는 안전

산재 대부분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관련 법·지침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도·감독해야 할 다양한 상황과 행동, 의무를 설명한다.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어겼다면, 이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자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죽어서 말 못 하는 피해자의 과실이 산재 사명을 ‘선지’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복수화를 운송업체 사장 D 씨는 2016년 8월 6일 노동자 E(당시 40), F(당시 35) 씨에게 탱크로리로 운송한(노동 98%)을 다른 탱크로리로 옮기려고 지시했다. 두 노동자는 탱크로리 간 호스를 연결했다. 그런데 호스를 밀어붙이는 판프의 압력으로 호스가 이격되지 못해 환산이 사망으로 분출했다. 둘은 전신 화상을 입었다. E 씨는 1주일 뒤 숨졌다.

사업주는 노동 20% 이상인 환산을 다룰 때 방호 조치를 하고, 노동자가 보호복·보호장갑·장화 등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장인 D 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내린 형벌은 벌금 300만 원에 그쳤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짧게 기록됐다.

권학범 법률사무소(법률 7지) metts@kookje.co.kr



www.pshanwoo.co.kr

NAVER 평산한우촌

평산한우촌

15년동안 오직 우리한우 한품목(1등급이상)만을 취급해온 식육식당 가족모임, 제모임, 환영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은 평산한우촌에서 함께 하세요.

♣상차림(1인) ₩4,000

천성산 산행을 하신다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평산한우촌에서 식사를 하시고 천성산천사우나에서 온천욕을 즐기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평산한우촌 (055)367-7535~6

위치: 양산 덕계지하도 지하1층(50번출입 통일APT 뒷편) | 대항주차장 완비(단체모임 환영)

천성산 온천은 연면적 3,200평 규모의 초·중·고·대·대학생까지 휴식공간으로 24시간 연중무휴이며 지하1,040㎡에서 암반을 통과 돌린 섭씨 38℃의 천성 온천수로 pH 8.7의 알칼리성 천성온천수(양산하천수)를 2000~2500리터까지,

■ 쿠폰 10장 이상 구매 시 이용요금 7,000원에서 8,000원으로 할인됩니다.

문의 (055)366-3672

기획기사(2020.8.5.) - (중)외출 타는 노동자(3편)

도급 체제 건설현장... 원청 처벌 강화해야 안전사고 막는다

산재는 기업범죄다

〈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동자 3명이 201m 아래로 추락해 죽었다. 이들은 건물 우리 위(커튼월)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고층용 작업대(PCS-C)를 위쪽으로 옮기고 있었다. 발을 딛고 있던 작업대가 갑자기 밑면에 서 떨어지자 낙했다. 지상에서 콘크리트 펌프에 레미콘을 넣던 다른 노동자도 떨어지던 작업대에 맞아 숨졌다. 이 외에도 작업대 추락 직접 목을 다친 노동자가 7명, 눈앞에서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노동자도 6명이 됐다. 모두 4명이 죽고 6명이 다쳤다. 2018년 3월 2일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물 A동 55층에서 사산된 비극이다.

■“도대체 책임자가누군가”

[illegible]

물리적 완충과 달리, 구조적 완충은 따지는 일만 복잡했다. 책임자들은 지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재빠르게 또 혼란스러워했다. 건물 사공사, 카펫틀 사공사, PCS - 나뭇잎째는 제다! 작업자들의 일부는 아직 지사-감독관 또는 또는 권장이 없고, 지사-감독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어디 재판부 "중증치도 노년기의 가장 밑에서 적절치 위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은 도해해 노후의 지사에 따라나 하였고, 누구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다.

상황은 정말 그랬다. 숨진 노동자들이 안전교육받았고, 작업의 최종 안전성 절차도 교육받았고, 작업 시공사의 치환은 안전



5일 부산 도심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산재 사업장과는 관련 없음.

이원준 프리랜서 windstorm@kookje.co.kr

하청·재하청 중층적 구조에서
작업 최종 승인자 대기업인데
사고 났을 때 하청에 더 무거운 형벌
현행 산안법 사업주 처벌 어려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 높임

그러나 도급관계의 최상위 사
행벌을 피했다. 재판부는 중층적
계의 사충부가 근본적인 재해 방

동자라는 말이다. 이렇다 보니 경영 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에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6월 정의당이 발의했고, 시민사회에서

◇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건물 A동

구분	구분	구분
건물 시공사 안전정착사업	장역 1년 집행유예	
커튼월 시공사 현장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PCS-C 납품업체 기술지원팀장	징역 8월 집행유예	
PCS-C 납품업체 기술지원팀장	징역 8월 집행유예	
건물 시공사 건축조장	벌금 700만 원	
건물 시공사 건축팀장	벌금 700만 원	
건물 시공사 안전팀장	벌금 700만 원	
커튼월 시공사 총괄조장	벌금 700만 원	
김리희사 총괄김리희	벌금 700만 원	
커튼월 시공사 현장조장 (B급)	벌금 200만 원	
건물 시공사	벌금 100만 원	
커튼월 시공사	벌금 150만 원	

실제 노동자들을 지시·감독하는 '현장책임자'로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양
심이 진행 중이다.

■ '도급관계 최상위자 처벌'을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노동자
책임 능력과 최종 권한을 가진
하게 처벌해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
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용자
자'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다. 원청 기업이
받는 그대로.

있다. 경영 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임

을 청구하는 게 법원의 핵심 내용이다.

부산에서도 도입은 논의가 뜨겁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중대재해기업철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2일 민주노동부산본부에서는 법 제정을 위해 지역이 해할 일을 놓고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차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 형벌이 아닌 상·가산금형을 맺지 않은 법안적 제삼자의 경영 책임을 범의자도 불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과연 이 모든

선사였다. 커튼월 시공사로부터는 안전설치와작업일정을지시받았다. 자재량이나 앵커 설치 여부를 보고한 후 PCS-C납품업체였다.임금은인력강업체 등을통해받았다.사실상도급사의 모든 곳에서 감독·지시를 받은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심장 역할을 맡은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곳

법에 대한 고의와 위반 사실, 그리고
런 사안이 노동자의 사망을 불렀다
을 입증해야만 한다. 또 사업주들
려면 그에게 안전 확보의 법적 의무
어야 하고, 노동자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자는 안전
관리자다. 사업주가 지정한 또

동분부 김혜진 활동가는 “차별을 강화하
는 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예방할
수 있는데도 비용을 이유로 노동자를 죽
임에 이르게 했다면, ‘살인’이고 범죄라
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에
의한 죽음에 관대해지지 않고, 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지난달 2일 민주노동 부산본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서정빈기자 photobin@kookje.co.kr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영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총 24대개정법률안 중 기업 징계문 부분 및 7조)
처벌 대상	실질적 계약관계의 노동자, 입원객의 책임자, 사후자	기업법인과 최고 경영책임자, 공무원
양형(시량)	지연 7시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지연 10시간 이하 벌금	지연 3시간 이하 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 위반 1년~20년 이하 징역
기업 처분	영업 정지	영업 정지, 보호관찰, 공공계약차탈, 영업 허가취소
공무원 처벌	규정 없음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만~3억 원 벌금
손해배상 책임	규정 없음	손해액의 10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배상

부산 산재 사망사고 4년간 208건
현장 근로감독관은 고작 56명뿐

14만여 곳 점검에 인력 태부
“지자체에 감독 권한 나누어

부산지역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로고마크로 쓰는 턱없이 부족하다.”
동부는 수요에 상응하지 못해서도,
독관 중에도 부상을 초월한다.

5일 국회산업안전정보포럼개최
부산고용노동부으로부터 받은
보인, 2016년 1~4월 부산에서
한 산업재해 28건은 208건에
설업, 제조업, 운수·항공 및
건설에서 가장 높았다. 사고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고
만 산업재해 안전을 점검할
은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장
기는 했다. 2017년 3월에는
의 근로감독관은 아를 현재 56명
가했다. 하지만 안전 담당해
는 147550명으로 7배 나
다.

근로감독관은 산업 현장
직장 내 각종, 국민안전도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부산청 (동·중·남·서·영도· 시하·부산청·연제구)	6만4892개	36명 (1인당 1802개)
부산 동부지청 (수영·해운대·동래· 금정구·기장군)	4만5534개	11명 (1인당 4139개)
부산 북부지청 (북·사상·강서구)	3만4600개	9명 (1인당 3844개)

까지 말이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관 수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 정부 일자리로 도입에 따라 2017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감독관 1000명을 늘릴 계획"이다. 중앙노동법원 전국을 본류감독관은 2311명으로 불어나지만 '예산 문제로 내년 이후 증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노총 부총반장은 "지난 근로감독관 수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에 근로감독관 권한 일부를 늘려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한다. **인센티브**는

[illegible]

